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자산불평등 양극화 추이 분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김기식 소장, 최새봄 연구원

(재)더미래연구소

1. 서론

- IMF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지수는 북유럽 복지국가는 물론 유럽 선진국이나 자유주의 국가에 비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 사실상의 완전 고용, 정규직을 중심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안정성에 기반하여 성장에 따른 시장 분배 기능이 작동해왔고, 전반적인 소득 향상이 불평등 이슈의 사회화를 억제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중성장시대를 지나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의 확산,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의 확대 등 시장 분배 기능은 약화된 반면, 이를 보완해 불평등을 완화시킬 사회 복지 등 재분배 정책과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어 왔고, 그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는 정책적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화두 중 하나가 되었다.
-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2021년 2월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를 통해 ‘메가 리치’라 불리는 상위 억만장자 1,000명은 코로나19 이전의 최고치로 부를 회복하는데 불과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전 세계 극빈층은 회복에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¹⁾.
- 주로 시장소득에 기반한 소득불평등은 익히 지적되고, 오랜 기간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어왔지만 최근 주목해야 할 것은 자산불평등 및 양극화의 심화와 자산의 세대 이전에 따른 계층 고착화 현상이다.
-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자산의 비율을 나타낸 피케티 지수는 산업화가 한세기 혹은 반세기 이상 앞섰던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피케티지수가 높다는 것은 자산이 소득에 비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상위 계층 쏠림 현상이 소득에 비해 더 큰 자산의 특성상 그만큼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산불평등이 보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근로의욕을 꺾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며²⁾, 다른 한편으로는 자산의 세대 이전을 통해 다음 세대의 계층 고착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교육과 일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고, 계층 상승이 가능했던 자본주의 1세대, 산업화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축적된 자본이 계속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 그 자산이 세대 이전되며 계층이 고착화되는 자본주의 2세대 시대가 되었다.
- 물려받는 재산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격차가 점점 더 명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만으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청년들은 주식 투자는 물론 가상화폐와 같은 고위험 투자

1) 옥스팜. ‘2021 불평등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스’.

2) “문제는 자산불평등이야, 바보들아”. 경향신문. 2021년 10월 27일자.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에 나서고 있다.

- 2018년까지만 해도 전체 증권 계좌에서 32.4% 수준에 머물렀던 40세 미만 청년층 주식계좌 수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1년 2분기 38%까지 치솟았다. 2030세대의 2019년 신규 계좌 개설 수는 273만 4,045개에서 2020년 991만 9,811개로 불과 1년새에 3.6배 이상 증가했고, 이 숫자는 2020년 전체 신규 계좌개설 수인 1,818만 4,342개의 약 55%에 달하는 비율이었다³⁾. 또한 2021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 중 57.3%는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 2021년 만 20~39세 500명을 대상으로 동아일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잡코리아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년의 45%는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못 불린다”고 응답했고, 71%는 자산증식을 위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⁵⁾.
- 본 보고서에서는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 소득자산점유율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자산불평등의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최근 10여년간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의 세대이전 추이와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에 근거해 소득 및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 지니계수는 한 사회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극화의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5분위 배율이나 소득자산점유율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의미한 바, 5분위 배율은 소득(자산)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자산)을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자산)으로 나눈 값이며, 이 배율이 높아질수록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를 뜻한다. 소득자산점유율은 특정 계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3)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청년 세대 주식 투자 위한 신규대출액 38조원 넘어”. 2021년 10월 3일자.

4)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들이 코인에 19조원 투자”. 코인데스크. 2022년 3월 31일자.

5) “청년 45%,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못불려“...71% 주식-펀드 투자”. 동아일보. 2021년 12월 1일자.

2.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

1. 개인의 세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

1) 지니계수 기준 소득불평등도

- <그림 1>은 WID(World Inequality Databook, 세계불평등연구소)⁶⁾의 통계 자료에 기초해 개인 단위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1980년 지니계수 0.421에서 1995년 0.457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속도로 악화되어왔다. 그러다가 1996년 지니계수 0.486, 1997년 0.493을 보이며 IMF 경제위기 직전에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표 1>).
- 이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2000년대에는 불평등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개인 단위의 세전소득 지니계수는 2004~2005년 사이 다소 완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1998년 0.467에서 2010년 0.557로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2011년 이후 지금까지 0.5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2>).

그림 1 개인 단위 세전소득 지니계수 (단위: 지수)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주1)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6) 세계불평등연구소는 토마 피케티, 루카 샹셀 등 프랑스 경제학자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의 소득, 부, 성별, 탄소 배출 등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연구하는 연구소이다. 이들은 통계기관과 세무당국, 대학, 국제기구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 간, 국가 내에서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측정한다.

7) WID에서 활용하는 '세전소득'은 연금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뜻하는 용어이고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시장소득'은 개인의 모든 소득 중 연금은 제외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표 1 개인 단위 세전소득
지니계수(1980~1997)

연도	지니계수
1980	0.421
1981	0.427
1982	0.425
1983	0.434
1984	0.441
1985	0.431
1986	0.433
1987	0.440
1988	0.444
1989	0.443
1990	0.445
1991	0.445
1992	0.445
1993	0.449
1994	0.454
1995	0.457
1996	0.486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표 2 개인 단위 세전소득
지니계수(1997~2021)

연도	지니계수
1997	0.493
1998	0.467
1999	0.487
2000	0.497
2001	0.501
2002	0.513
2003	0.517
2004	0.520
2005	0.503
2006	0.538
2007	0.547
2008	0.553
2009	0.548
2010	0.557
2011	0.557
2012	0.554
2013	0.551
2014	0.550
2015	0.553
2016	0.555
2017	0.556
2018	0.556
2019	0.553
2020	0.553
2021	0.553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 1980~1990년대 우리나라의 개인 단위 세전소득 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물론, 이탈리아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 그리고 호주와 영국 등 일부 영미권보다 높았고, 캐나다, 미국, 일본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⁸⁾(〈표 3〉).

표 3 개인 단위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 국제비교(1980~1997)

연도	한국	영미권 국가(자유주의 복지국가)				일본	유럽 선진국(조합주의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1980	0.421	0.454	0.503	0.419	0.415	0.478	0.401	0.354	0.432	0.353	0.368
1981	0.427	0.46	0.493	0.419	0.415	0.472	0.394	0.345	0.422	0.351	0.372
1982	0.425	0.468	0.49	0.426	0.415	0.47	0.395	0.343	0.415	0.36	0.37
1983	0.434	0.48	0.498	0.42	0.421	0.473	0.399	0.341	0.425	0.363	0.38
1984	0.441	0.489	0.493	0.422	0.427	0.477	0.398	0.347	0.427	0.373	0.382
1985	0.431	0.491	0.488	0.427	0.431	0.485	0.4	0.351	0.431	0.372	0.385
1986	0.433	0.492	0.481	0.434	0.432	0.492	0.404	0.366	0.441	0.371	0.376
1987	0.44	0.5	0.482	0.45	0.438	0.507	0.412	0.376	0.445	0.371	0.378
1988	0.444	0.515	0.481	0.463	0.444	0.512	0.427	0.382	0.449	0.377	0.375
1989	0.443	0.511	0.487	0.443	0.438	0.518	0.433	0.386	0.453	0.369	0.376
1990	0.445	0.513	0.466	0.439	0.458	0.52	0.438	0.388	0.45	0.358	0.378
1991	0.445	0.512	0.471	0.446	0.461	0.509	0.427	0.386	0.443	0.364	0.378

1992	0.445	0.524	0.48	0.449	0.456	0.475	0.421	0.391	0.439	0.36	0.377
1993	0.449	0.521	0.494	0.454	0.465	0.48	0.415	0.402	0.441	0.369	0.377
1994	0.454	0.521	0.515	0.457	0.469	0.484	0.411	0.401	0.443	0.391	0.385
1995	0.457	0.528	0.497	0.453	0.474	0.494	0.409	0.407	0.443	0.401	0.384
1996	0.486	0.536	0.502	0.449	0.479	0.505	0.418	0.413	0.442	0.393	0.386
1997	0.493	0.542	0.510	0.458	0.476	0.503	0.428	0.417	0.446	0.404	0.397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 그러다 IMF 경제위기 이후 <표 4>에 나와있듯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유럽 및 북유럽 국가를 물론, 캐나다와 일본까지 제쳐, 현재 비교국가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이고 있다.

표 4 개인 단위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 국제비교(1998~2021)

연도	한국	영미권 국가(자유주의 복지국가)				일본	유럽 선진국(조합주의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1998	0.467	0.543	0.510	0.460	0.485	0.505	0.437	0.422	0.448	0.405	0.395
1999	0.487	0.547	0.512	0.471	0.491	0.511	0.436	0.422	0.449	0.409	0.408
2000	0.497	0.550	0.525	0.475	0.478	0.522	0.437	0.426	0.449	0.391	0.410
2001	0.501	0.544	0.516	0.462	0.485	0.532	0.440	0.434	0.447	0.381	0.395
2002	0.513	0.540	0.517	0.469	0.487	0.541	0.443	0.428	0.441	0.383	0.395
2003	0.517	0.544	0.518	0.468	0.497	0.548	0.435	0.426	0.444	0.394	0.381
2004	0.520	0.551	0.523	0.471	0.490	0.556	0.447	0.426	0.446	0.399	0.389
2005	0.503	0.561	0.529	0.478	0.498	0.557	0.467	0.426	0.441	0.410	0.402
2006	0.538	0.568	0.533	0.490	0.501	0.558	0.472	0.427	0.441	0.419	0.407
2007	0.547	0.564	0.535	0.480	0.499	0.559	0.482	0.429	0.445	0.419	0.401
2008	0.553	0.562	0.527	0.464	0.488	0.550	0.484	0.427	0.441	0.412	0.404
2009	0.548	0.557	0.516	0.472	0.506	0.536	0.485	0.424	0.428	0.403	0.394
2010	0.557	0.568	0.523	0.476	0.465	0.541	0.480	0.430	0.435	0.419	0.417
2011	0.557	0.573	0.525	0.468	0.473	0.538	0.483	0.431	0.440	0.413	0.419
2012	0.554	0.584	0.520	0.480	0.485	0.538	0.482	0.433	0.432	0.392	0.421
2013	0.551	0.578	0.529	0.493	0.500	0.540	0.496	0.430	0.430	0.394	0.432
2014	0.550	0.585	0.531	0.490	0.480	0.539	0.499	0.432	0.431	0.400	0.438
2015	0.553	0.584	0.529	0.493	0.470	0.541	0.498	0.434	0.428	0.409	0.434
2016	0.555	0.584	0.512	0.491	0.468	0.540	0.496	0.444	0.425	0.393	0.437
2017	0.556	0.581	0.536	0.497	0.466	0.539	0.492	0.449	0.423	0.400	0.439
2018	0.556	0.584	0.525	0.486	0.467	0.539	0.487	0.450	0.424	0.394	0.440
2019	0.553	0.581	0.523	0.486	0.465	0.539	0.486	0.447	0.426	0.396	0.443
2020	0.553	0.581	0.523	0.486	0.465	0.539	0.485	0.444	0.426	0.406	0.445
2021	0.553	0.581	0.523	0.486	0.465	0.539	0.485	0.444	0.426	0.406	0.445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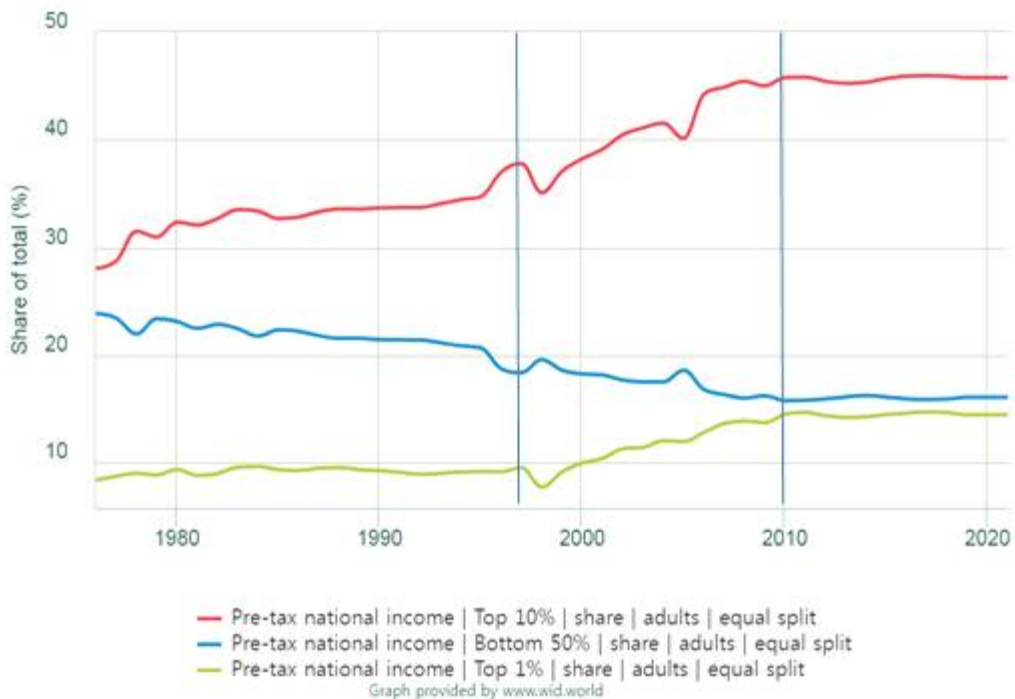
8) 본 보고서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의 국제비교를 위해 영미권 국가(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럽 선진국(조합주의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 등으로 구분한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참고했다.

2) 소득점유율 기준 소득양극화

- 소득점유율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양극화의 측면에서도 1980~1990년대 초반까지에 비해 IMF 경제위기 이후인 2000년대 들어 상위 1%와 10%의 소득점유율은 눈에 띄게 상승한 반면, 하위 50%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해 소득양극화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격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1980년 9.53%에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7.77%로 오히려 감소했고, 상위 10%는 1980년 32.76%에서 1998년 35.20%로 소폭 증가했으며, 하위 50%는 23.11%에서 19.57%로 감소했다(<표 5>).
 - 그러나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IMF 이후 2000년대 들어서 상위 1%와 상위 10%의 점유율은 급속도로 상승하는데, <표 6>을 살펴보면 상위 1%는 2000년 10.13%에서 2010년 14.8%로 상승하고, 상위 10%는 38.63%에서 46.59%로 상승했다. 반면 하위 50%는 2000년 18.23%에서 2010년 15.73%로 상위 1%의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눈에 띄게 커졌다.
 - 2011년 이후부터 이 격차는 고착화되어 2021년 현재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14.71%를 보이고 있고, 상위 10%는 46.45%, 하위 50%는 16.04%를 보이고 있다.

그림 2 개인 단위 세전소득 소득점유율 (단위: %)

Income inequality, Korea, 1976-2021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표 5 개인 단위 세전소득 소득점유율 (1998-2021년) (단위: %)

연도	소득 점유율		
	상위 1%	상위 10%	하위 50%
1980	9.53	32.76	23.11
1981	8.98	32.45	22.45
1982	9.12	33.04	22.82
1983	9.76	33.97	22.41
1984	9.83	33.88	21.93
1985	9.54	33.18	22.32
1986	9.46	33.28	22.18
1987	9.7	33.82	21.77
1988	9.76	34.12	21.52
1989	9.53	34.04	21.52
1990	9.44	34.14	21.42
1991	9.26	34.13	21.39
1992	9.06	34.09	21.38
1993	9.16	34.45	21.12
1994	9.31	34.86	20.84
1995	9.36	35.15	20.63
1996	9.26	37.28	18.72
1997	9.68	38.13	18.35
1998	7.77	35.20	19.57

표 6 개인 단위 세전소득 소득점유율 (1998-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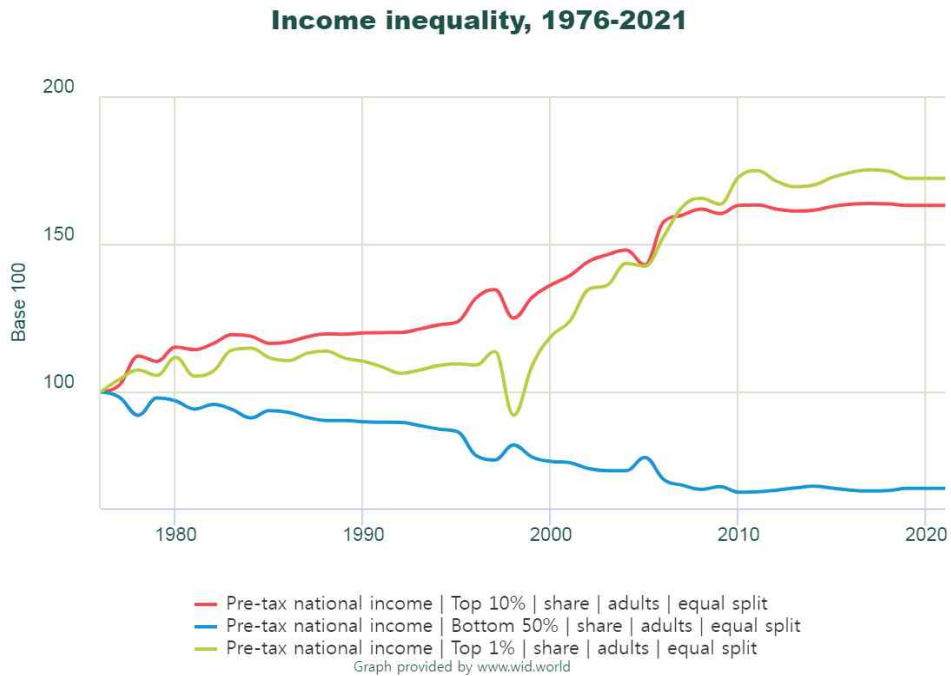
연도	소득 점유율		
	상위 1%	상위 10%	하위 50%
1999	9.26	37.37	18.57
2000	10.13	38.63	18.23
2001	10.56	39.53	18.13
2002	11.52	41.02	17.64
2003	11.64	41.67	17.46
2004	12.29	42.18	17.47
2005	12.19	40.74	18.55
2006	13.02	44.79	16.76
2007	13.9	45.53	16.29
2008	14.15	46.14	15.96
2009	13.99	45.7	16.18
2010	14.8	46.59	15.73
2011	14.98	46.62	15.76
2012	14.67	46.22	15.89
2013	14.5	46	16.07
2014	14.54	46.05	16.21
2015	14.76	46.4	16.06
2016	14.91	46.64	15.89
2017	14.98	46.71	15.83
2018	14.93	46.66	15.87
2019	14.71	46.45	16.04
2020	14.71	46.45	16.04
2021	14.71	46.45	16.04

- <그림 3>은 소득점유율 비중의 변화를 상대적인 지수로 살펴본 그래프로, 1976년의 소득을 100이라할 때, 상위 10%의 소득은 1997년 134.6까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 125로 하락하였다가 다시 상승곡선을 보이며 2010년 163.1 수준까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후 현재 2021년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상위 1%의 소득 역시 1997년 113.7에서 1998년 92.1로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상승곡선을 그렸고,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172.2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하위 50%는 1997년 77에서 1998년 82.1로 약간 상승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하락했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67.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눈에 띄는 점은 1976년 소득과 비교할 때 상위 10%보다 상위 1%의 초고소득층 소득점유율 비중의 확대가 IMF 이후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2006년까지의 소득점유율 비중 변화는 상위 1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2007년 들어서 상위 1%의 소득 비중 증가가 더욱 커졌고 결과적으로 40년의 기간동안 소득점유율 비중이 가장 높아진 집단은 상위 1%의 초고소득층이었다.

그림 3 개인 단위 세전소득 소득 점유 비중의 변화(1976년 소득=100) (단위: 지수)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을 비교하면 2021년 기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14.71%로 제시된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46.45%로 미국(45.69%)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위 50% 소득점유율 역시 16.04%로 미국(13.57%)을 제외하고 비교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표 7 2021년 개인 단위 세전소득 기준 상위 1%, 상위 10% 소득점유율

상위 1% 소득점유율		상위 10% 소득점유율		하위 50% 소득점유율	
국가	소득점유율(%)	국가	소득점유율(%)	국가	소득점유율(%)
이탈리아	8.71	스웨덴	30.78	스웨덴	23.78
프랑스	9.84	이탈리아	32.21	프랑스	22.72
스웨덴	10.54	프랑스	32.23	덴마크	21.38
호주	11.28	호주	32.6	이탈리아	20.7
영국	12.65	덴마크	33.86	영국	20.35
독일	12.77	영국	35.67	독일	18.99
덴마크	12.91	독일	37.07	일본	16.78
일본	13.11	캐나다	39.7	호주	16.6
캐나다	13.91	일본	44.89	캐나다	16.25
한국	14.71	미국	45.69	한국	16.04
미국	19.06	한국	46.45	미국	13.57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2021년 기준

2.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소득불평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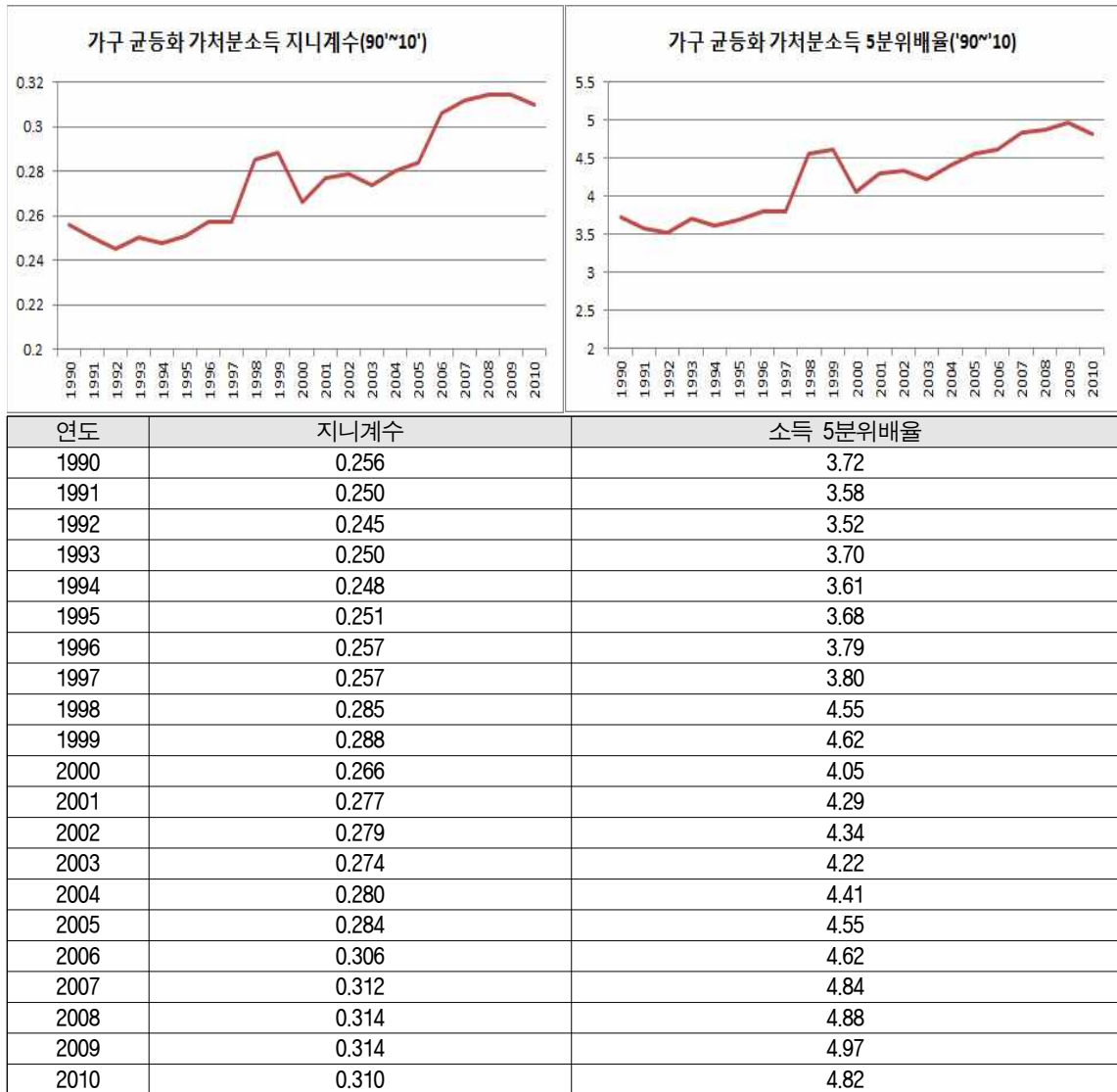
- 한편, 통계청과 OECD에서는 개인 단위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WID와는 달리 가구 단위로 수집된 소득통계를 균등화 처리를 통해 개인의 소득으로 나타내고 있으며⁹⁾, 이후 서술하겠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집계된 소득불평등도는 앞서 살펴본 개인 단위로 수집된 소득불평등도와는 객관적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 본 보고서에서는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소득불평등도를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처분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에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회수당 등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과 세금, 보험료 등 공적 이전지출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뜻한다. 시장소득은 공적 이전소득과 공적 이전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뜻한다.

1)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

- 1990~2010년 사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 추이는 지니계수상으로나 소득5분위배율상 앞서 살펴본 개인 단위 세전소득 기준과 큰 차이가 없다. 두 기준 모두 IMF 경제위기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는 점은 동일하다.

9) 가구 소득으로 집계된 소득통계를 가구원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할 때에는 단순히 가구소득/가구원 수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조정값을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왜냐하면 1인 가구와 비교해서 4인가구는 주택, 자동차 등의 재화를 가구원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으므로 그 경제적 효용을 단순 나누기의 방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OECD에서는 균등화 처리 방법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제곱근 지수 방법을 사용한다. (예: 성인 2명과 아동 2명 가구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이 가구의 균등화 개인소득은 200만원임.)

그림 4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1990~2010년)



출처: 가계동향조사 도시2인가구¹⁰⁾

주1) 가처분소득: 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지출

주2) 소득5분위 배율: 소득 상위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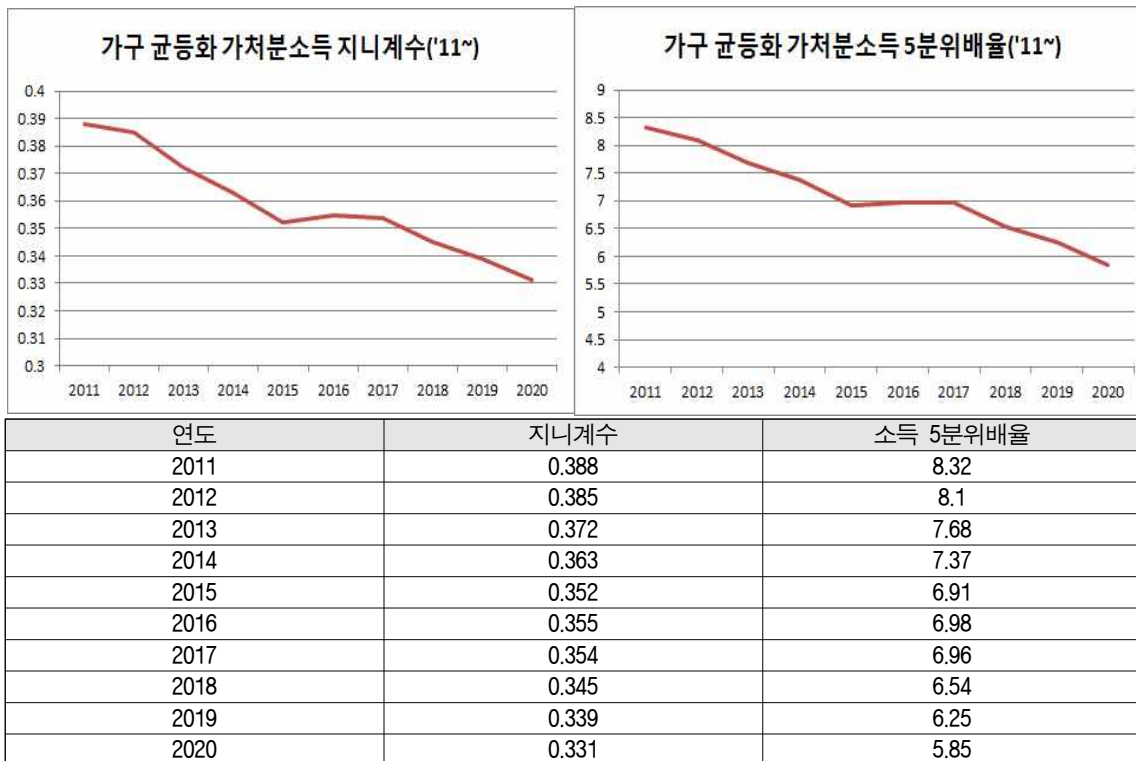
- 1990~2010년 사이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4>를 살펴보면 1997~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급속하게 치솟은 기간을 포함해 2000년대 전체적으로 두 지표 모두 상향하는 양상을 보여주어 이 시기 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초반 0.25 수준의 지니계수를 유지했고,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나타낸 소득5분위배율 역시 3.7배 수준을 보였지만, 1998년 IMF 경제

10) 통계청의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공식 소득분배지표는 2010년 이전에는 가계동향조사, 그리고 2011년부터는 행정자료를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전 가구를 대상으로, 5년동안 매년 면접조사 방식으로 연간소득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고, 가계동향조사는 농가를 제외한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동안 매일 가계부기장방식으로 소득을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는 학업이나 직장 등으로 떨어져살고 있는 가족을 제외했지만, 가금복 자료는 이를 포함하였다.

위기로 인해 지니계수는 0.285, 소득5분위배율은 4.55배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후 다소 완화되는 경향도 보였으나 2010년 지니계수 0.310, 소득 5분위배율 4.82배로 기록되며 IMF 경제 위기 이후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2011~2020년의 기간 동안에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소득 불평등도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 개인 단위의 세전소득 기준과는 달리, **가구 균등화 가처분 소득 기준에서는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앞서 <그림 2>에서 살펴보았듯 개인 단위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557~2020년 0.553을 보이며 10년의 기간동안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은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은 2011년 각각 0.388, 8.32배에서 2020년 0.331, 5.85배로 감소하였다.

그림 5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2011년~)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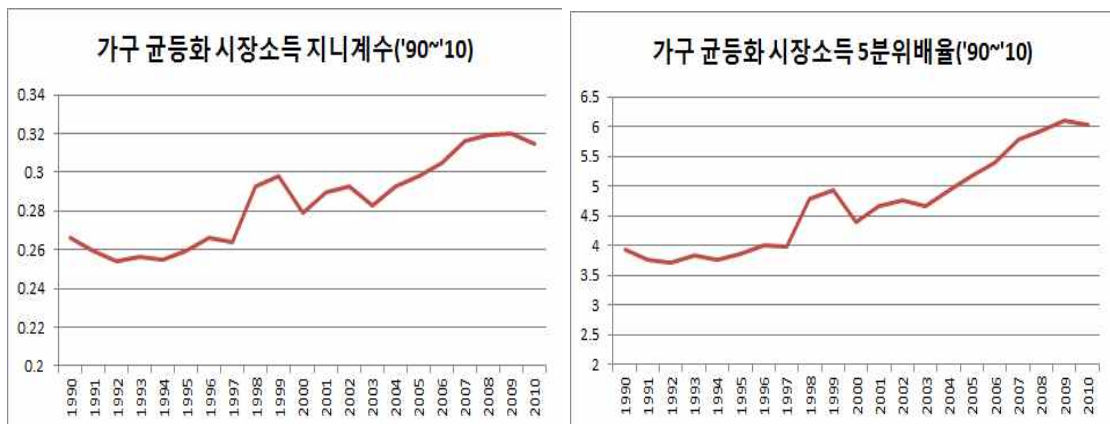
주1) 가처분소득: 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지출

주2) 소득5분위 배율: 소득 상위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2) 가구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

- 한편, 사회보험, 연금, 수당과 같은 공적 이전소득과 세금, 보험료 등 공적 이전지출이 제외된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 역시 1990~2010년까지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2010년 이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나타난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 분배지표는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앞서 살펴본 개인 단위 세전소득과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니계수 0.26, 5분위배율 3.7배 수준에서 머물다가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2010년 지니계수 0.315, 5분위배율 6.02배를 보였다.

그림 6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199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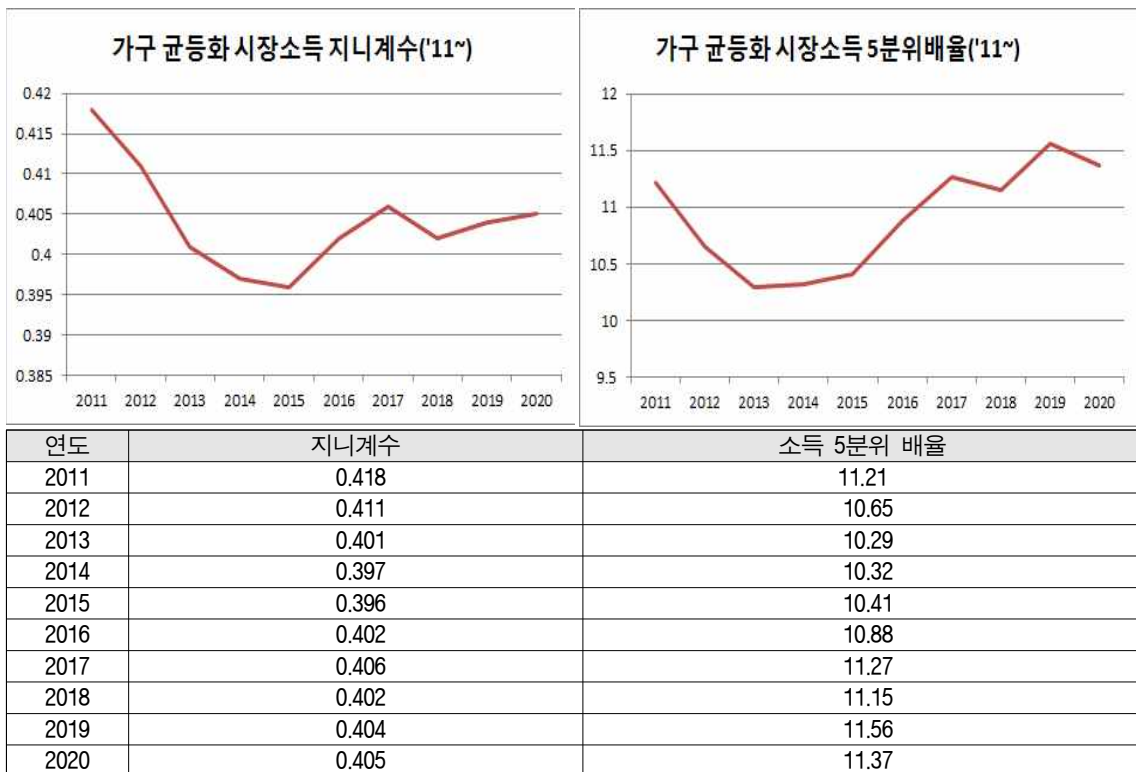
연도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1990	0.266	3.93
1991	0.259	3.77
1992	0.254	3.71
1993	0.256	3.84
1994	0.255	3.76
1995	0.259	3.85
1996	0.266	4.01
1997	0.264	3.97
1998	0.293	4.78
1999	0.298	4.93
2000	0.279	4.40
2001	0.290	4.66
2002	0.293	4.77
2003	0.283	4.66
2004	0.293	4.94
2005	0.298	5.17
2006	0.305	5.39
2007	0.316	5.79
2008	0.319	5.93
2009	0.320	6.11
2010	0.315	6.02

출처: 가계동향조사 도시2인가구

주1)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지출

- 그러나 2011년 이후 시장소득 지니계수 및 5분위배율은 점차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다시 악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최근까지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던 가처분소득 기준과는 다르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5년 이후 지니계수가 상승하며 소득불평등도가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림 7>에서 보이듯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 소득분배지표는 2011년~2015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1년부터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던 개인 세전 소득 기준과도 다르고, 2011년부터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과도 다른 양상이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418에서 2015년 0.396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 0.402에서 2020년 0.405까지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5분위배율 역시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15년 10.41배에서 2020년 11.37배를 보이는 등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7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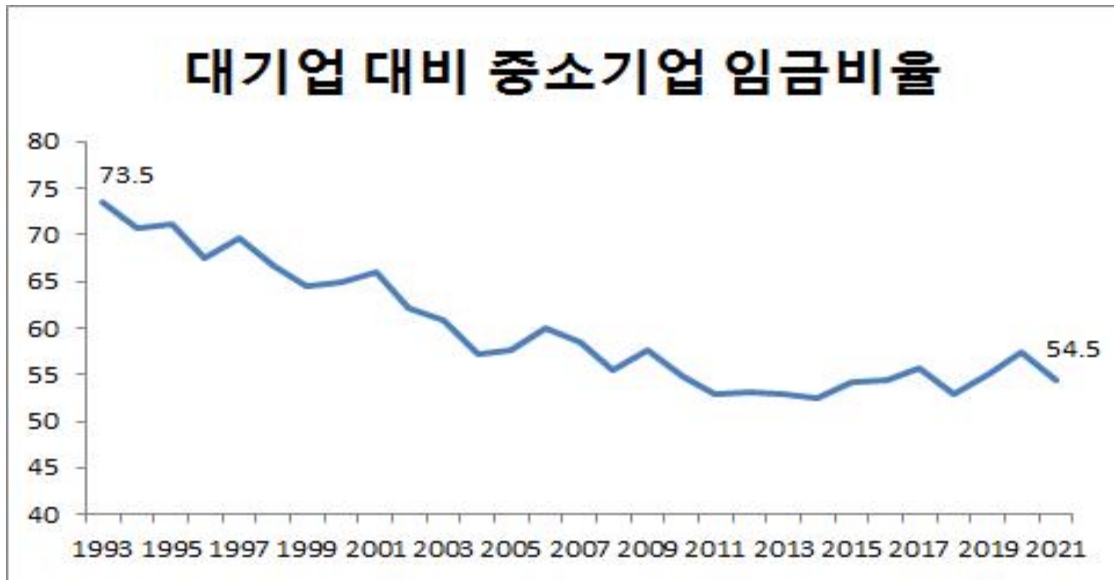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균등화지수

주1)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사적 이전지출

-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어왔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바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비율은 1993년 73.5%에서 2021년 54.5%까지 감소했다. 이는 미국(2015년 기준, 88.7%), 일본(2017년 기준, 88.1%), 프랑스(2015년 기준, 72.8%)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¹⁾.

그림 8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 변화 추이 (1993~2021년)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1) 임금비율=중소기업 임금/대기업임금*100

주2)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함

주3) 대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임. 중소기업은 1993-1998년까지 10-299인 이하 사업장, 1999년 이후는 5-299인 이하 사업장임.

주4) 2008년 이후 추정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으로 이전과 단순 비교할 수 없음.

3. 재산소득 불평등도

- 소득불평등 중에서도 특히 저축이나 주식 등 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재산소득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이 밝히고 있는 2020년 기준 소득의 분위별 신고현황을 나타낸 <표 8>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상위 10% 점유율은 전체 근로소득의 31.3%인 반면, 이자소득의 상위 10% 점유율은 전체 이자 소득의 90.7%, 배당소득의 상위 10% 점유율은 전체 배당소득에 94.6%에 달할만큼 재산소득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8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상위 10%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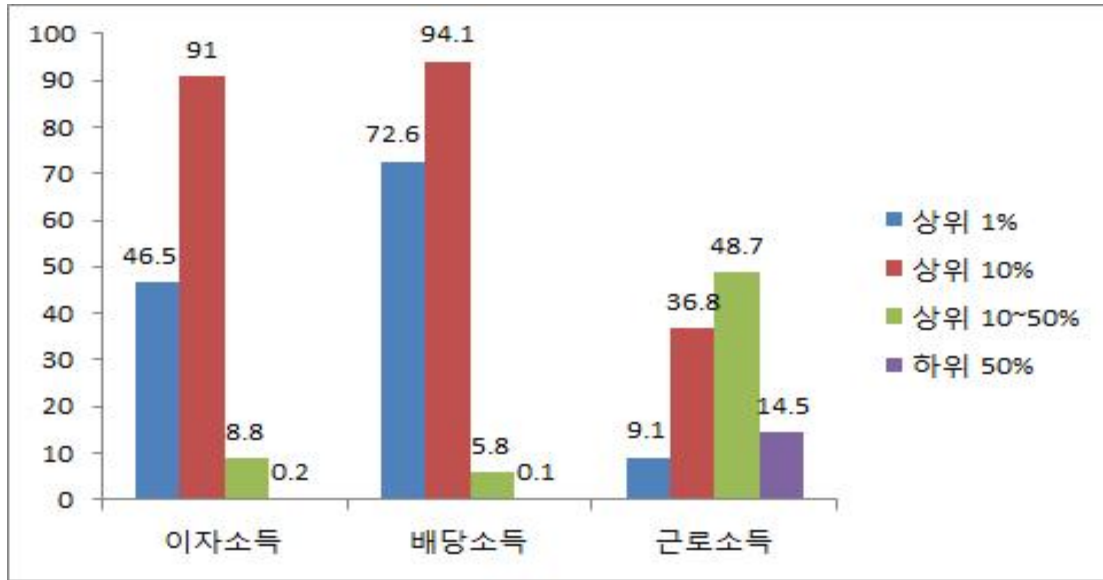
연도	이자소득 상위 10% 점유율	배당소득 상위 10% 점유율	근로소득 상위 10% 점유율
2019년	91.0%	93.1%	31.1%
2020년	90.7%	94.6%	31.3%

출처: 국세통계포털.

-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그림 9>)에서는 상위 1%의 점유율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이자소득의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5%였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7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노민선(2018).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p. 13.

그림 9 2018년 기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의 계층별 점유율



출처: 장혜영 의원실(2020). '2015-2018년 이자,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100분위 자료'.

- 지역별로 재산소득의 비중과 규모 역시 큰 격차가 나고 있다. 2020년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재산소득은 410만원에 비중은 경상소득의 6.6%인 반면, 서울의 재산소득은 686만원으로 경상소득 6,826만원의 10%에 달했다.

표 9 연도별 전국 경상소득 및 재산소득 비중 (단위: %, 만원)

시도별	소득, 자산분류별 (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경상소득	4,233	4,479	4,658	4,770	4,882	5,478	5,705	5,828	5,924	6,125
	재산소득	189	204	190	191	221	353	380	380	417	432
	재산소득 비중(%)	4.5	4.6	4.1	4.0	4.5	6.4	6.7	6.5	7.0	7.1
서울	경상소득	4,855	4,923	5,034	5,253	5,366	6,172	6,495	6,595	6,575	6,826
	재산소득	286	280	291	300	360	565	614	609	609	686
	재산소득 비중(%)	5.9	5.7	5.8	5.7	6.7	9.2	9.5	9.2	9.3	10.0
그외	경상소득	4,140	4,379	4,565	4,651	4,810	5,350	5,670	5,807	5,991	6,200
	재산소득	161	186	172	161	193	289	335	338	423	410
	재산소득 비중(%)	3.9	4.2	3.8	3.5	4.0	5.4	5.9	5.8	7.1	6.6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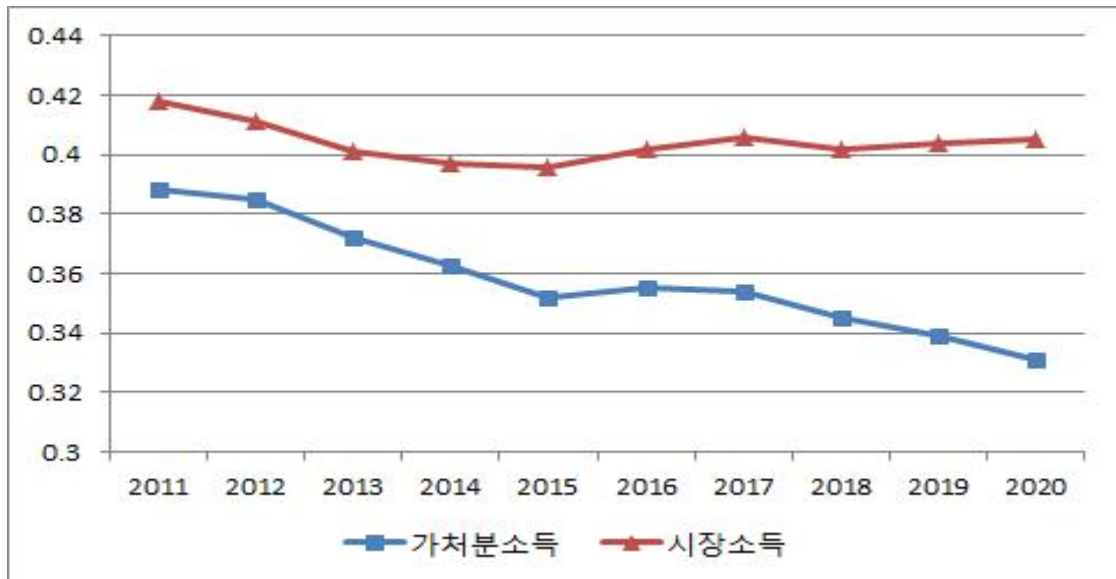
4. 소결

- 가처분소득은 세전소득이나 시장소득과는 달리, 복지 등 재분배 기능을 통한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세전소득과 시장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10>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특히 2017년 이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 지니 계

수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를 크게 확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시장소득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소득불평등도를 약화시킨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추진해야함을 의미한다.

- 앞서 언급했듯 가구 균등화 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을 균등화 지수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으로, 가구 구성원 개인의 소득이 높더라도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노인 등 피부양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 균등화 처리를 한 소득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개인 단위 세전 소득에 비해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불평등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과는 달리,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사회보장 급여나 수당 등 공적 이전소득과 세금, 보험료 등 이전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은 사회적 재분배 기능이 적용된 소득이라는 점에 있어서 개인 세전소득과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작게 나타난다.

그림 10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격차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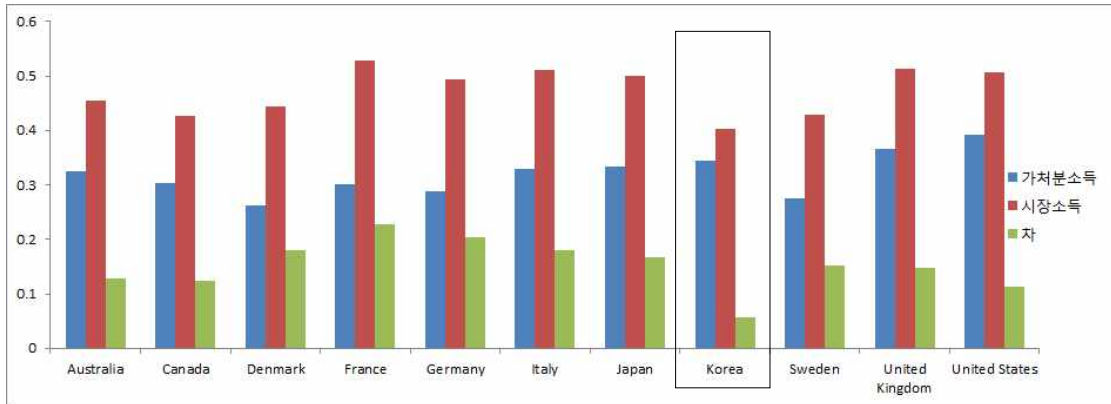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비교대상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소득불평등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재분배 기능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곧 공적 이전소득만큼¹²⁾ 두 소득 간 격차가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2018년 기준 가구 균등화 가처분소득과 시장소득 지니계수 간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는 제시된 국가 중 가장 작은 차이를 보여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가장 작

12) 물론 공적 이전지출(세금, 보험료 등)까지 제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적 이전소득의 혜택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은 이전지출 역시 적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간 차이를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 즉 소득재분배 효과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참고: “잘살수록 소득불평등 낮아...분배하되 성장 동력 키워야”. 중앙일보 오피니언. 2019년 2월 20일자.

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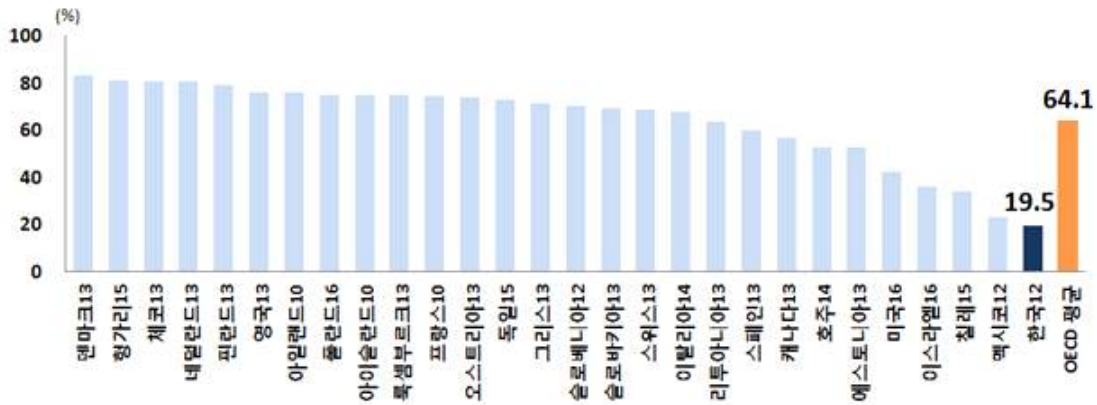
그림 11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간 국제비교(2018년 기준)



출처: OECD Stats(2018).

- 현대경제연구원¹³⁾에서 LIS(룩셈부르크소득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 조세재정정책 전·후의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와 소득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¹⁴⁾은 평균 64.1%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9.5%에 불과했다(그림 12).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효과 역시 OECD 회원국 평균은 62.1%p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1.5%p에 그쳤다(그림 13).

그림 12 OECD 국가들의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빈곤탈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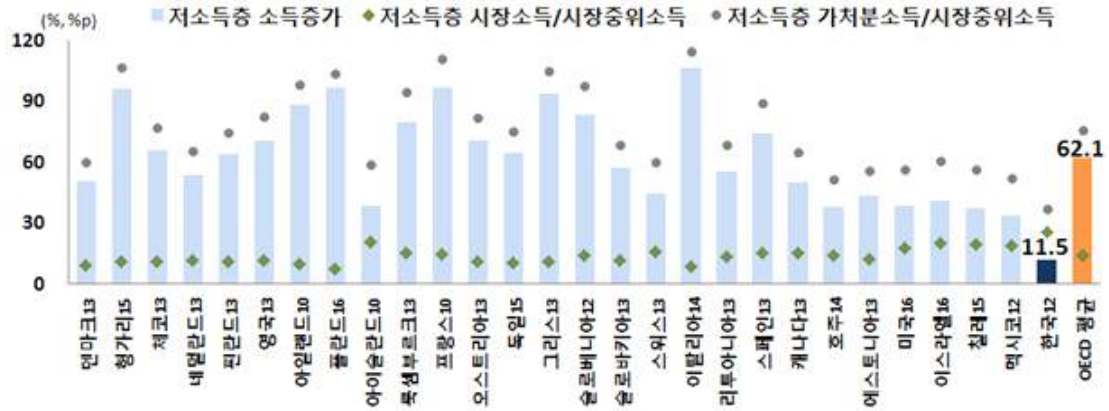


출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18), p.3

13) 현대경제연구원(2018).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14) 빈곤탈출률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뜻함.

그림 13 국가별 정부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개선정도



출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18),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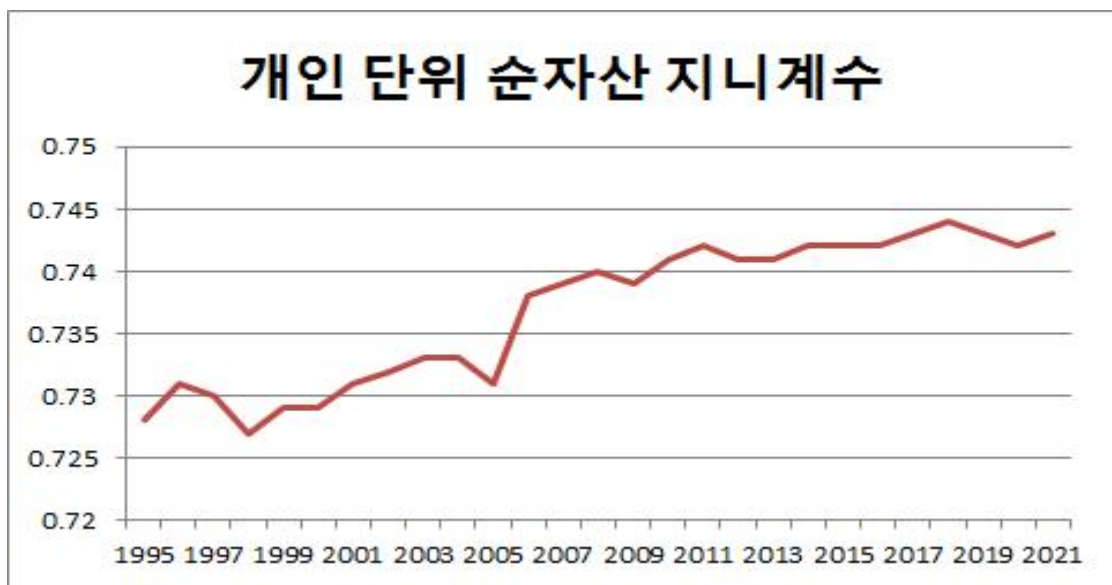
- 따라서 현실적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나 조세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재분배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자산불평등

1. 개인 단위 순자산불평등도

- WID 통계에 의하면 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개인 단위 순자산 지니계수는 <그림 14>에 나타나듯이 1995년 0.728에서 1997년 0.730, 1998년 0.727 등 IMF 경제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계속 상승했고, 2011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순자산 지니계수는 0.7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4 개인 단위 순자산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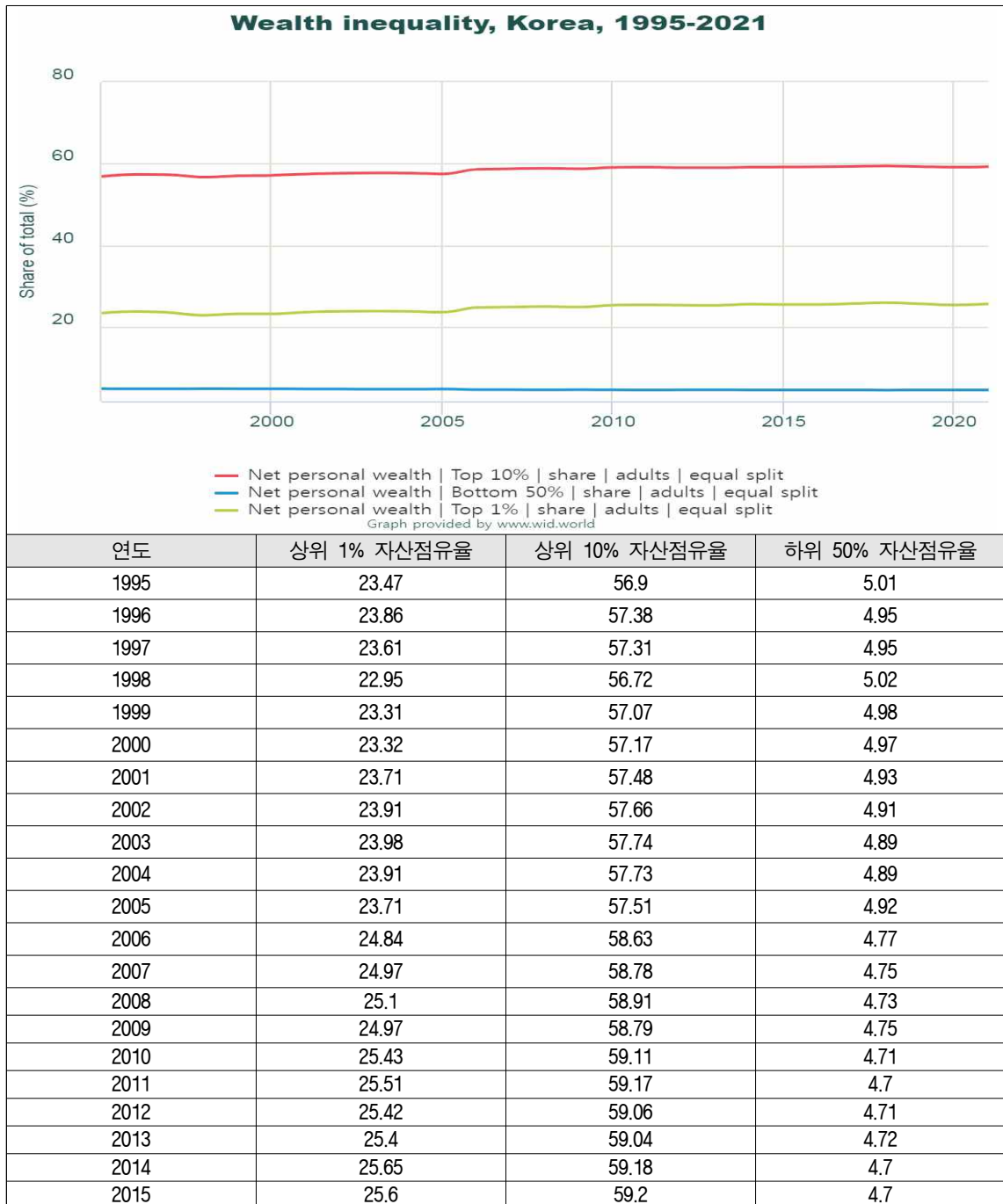


연도	지니계수	연도	지니계수
1995	0.728	2009	0.739
1996	0.731	2010	0.741
1997	0.730	2011	0.742
1998	0.727	2012	0.741
1999	0.729	2013	0.741
2000	0.729	2014	0.742
2001	0.731	2015	0.742
2002	0.732	2016	0.742
2003	0.733	2017	0.743
2004	0.733	2018	0.744
2005	0.731	2019	0.743
2006	0.738	2020	0.742
2007	0.739	2021	0.743
2008	0.740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 IMF 경제위기 당시 순자산 불평등은 소득불평등과 달리 오히려 하락하였는데,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고소득층의 손실 규모가 보다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¹⁵⁾.
- <그림 15>는 1995~2021년의 기간동안 상위 1%, 상위 10%, 하위 50%의 순자산점유율을 나타낸 그래프로, 상위 1%의 자산점유율은 1995년 23.47%에서 2021년 25.76%로,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은 56.9%에서 59.32%로 증가한 반면, 하위 50%의 자산점유율은 5.01%에서 4.68%로 하락했다.

그림 15 개인 단위 순자산 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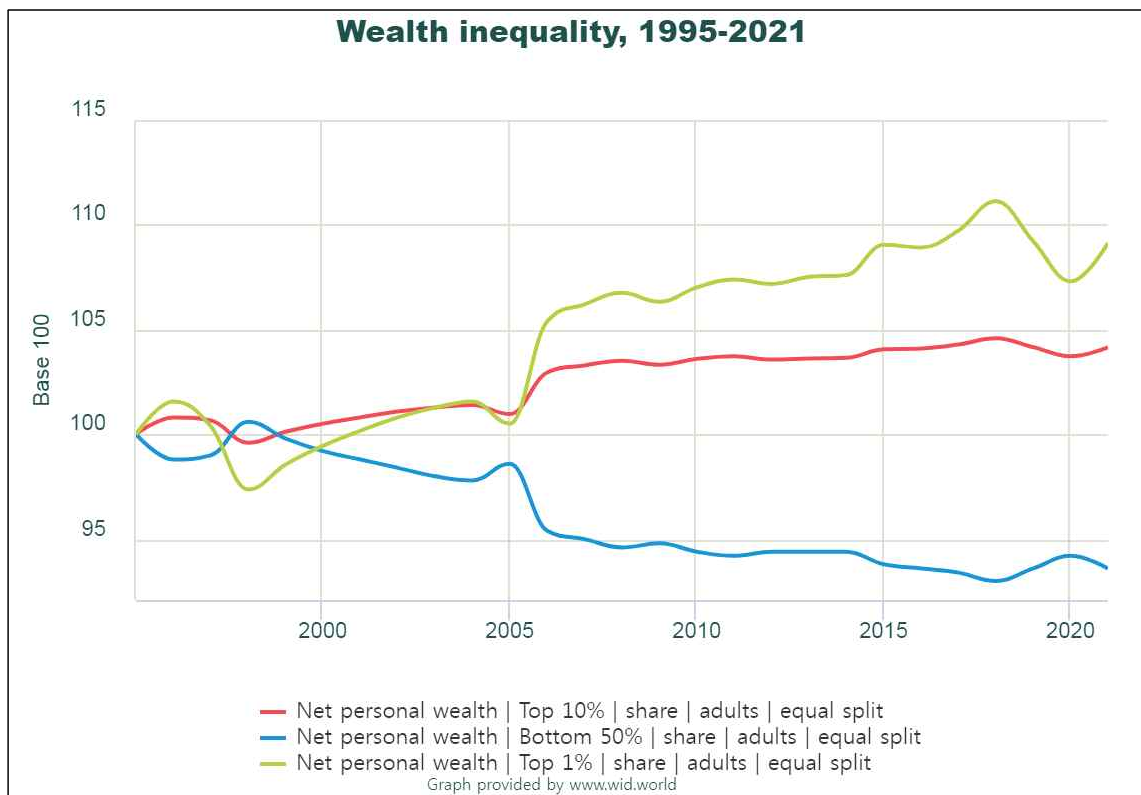
15)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2001).

2016	25.6	59.24	4.69
2017	25.79	59.34	4.68
2018	26.03	59.47	4.66
2019	25.76	59.32	4.68
2020	25.48	59.17	4.7
2021	25.76	59.32	4.68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 <그림 16>은 1995년의 자산을 100이라고 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상위 1%는 1998년 97.4까지 하락했다가 2006년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21년 109.1까지 상승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자산의 최상층 집중도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개인 단위 세전소득 기준 소득점유율에서 상위 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과 같은 양상이다(p.9의 <그림 3>). 상위 10%는 1998년 99.6을 보이고 2021년 104.1까지 상승했다. 반면 하위 50%는 1998년 100.6에서 2006년 대폭 하락한 이후 2021년 93.6까지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목해야 할 점은 2005~2010년의 기간동안 상위 1%의 점유율은 100.5에서 107로 7% 가까이 상승했고, 상위 10% 점유율 역시 101에서 103.6으로 상승한 반면, 하위 50%는 이 기간에만 98.6에서 94.4로 5% 가까이 급락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대폭 확대된 격차는 2022년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림 16 개인 단위 순자산 점유 비중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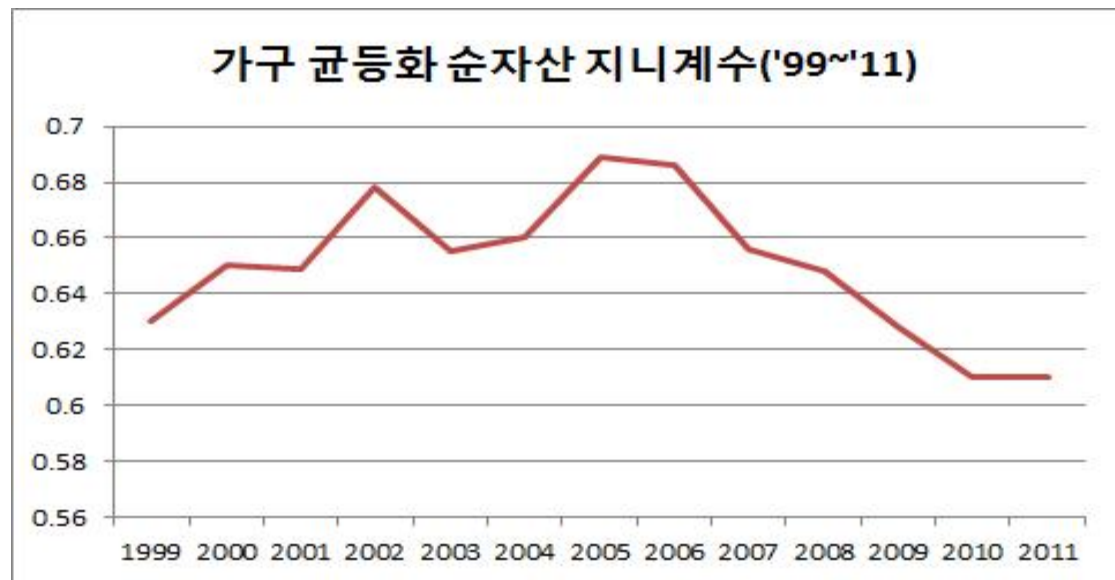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2. 가구 균등화 순자산불평등도

1) 1999년~2011년

- <그림 17>에서 보이듯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순자산불평등도는 1999년 지니계수 0.629 을 보이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2006년 지니계수 0.682를 보인 이후 2011년 0.610까 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¹⁶⁾. 이러한 양상은 후술하겠지만 2000년대의 부동산 폭등 및 안정 기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가구 균등화 순자산 지니계수(1999~2011)



연도	순자산 지니계수
1999	0.629
2000	0.654
2001	0.652
2002	0.682
2003	0.662
2004	0.670
2005	0.686
2006	0.682
2007	0.666
2008	0.643
2009	0.626
2010	0.612
2011	0.610

출처: 전병유(2016)가 노동패널조사(가계)를 활용하여 추정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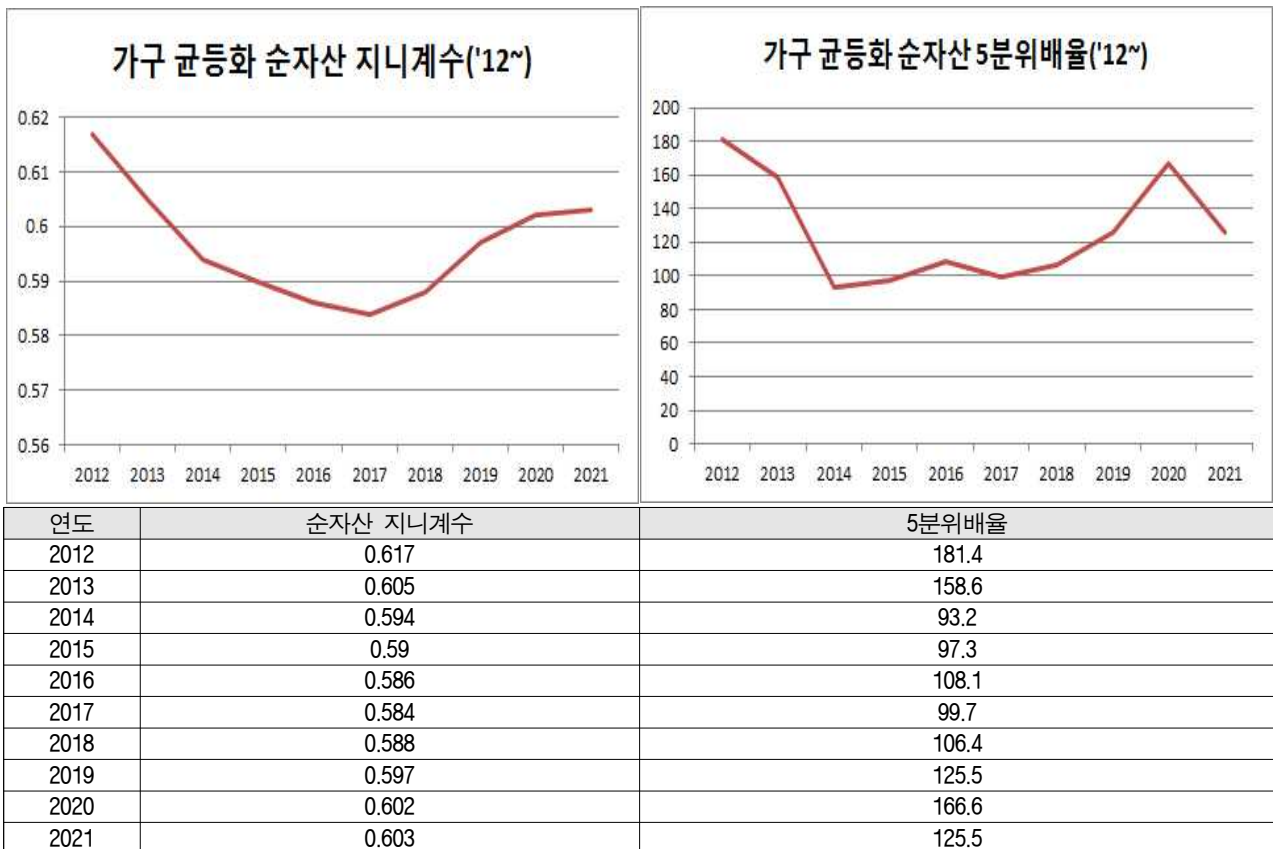
주1) 순자산: 자산(금융자산, 실물자산)-부채(금융부채, 임대보증금)

16) 2012년 이전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데이터의 한계로 전병유(2016)가 노동패널조사(가계)를 활용하여 계산한 지니계 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2) 2012년~2021년

- <그림 18>에서 확인되듯이 가구 균등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0.588, 2021년 0.603을 보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5분위배율 역시 2012년 181.4배에서 2016년 108.1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106.4, 2020년 166.6배로 정점을 찍었고, 2021년에 와서 125.5배로 하락했다. 이 역시 후술하겠지만 부동산이 다소 안정화되었던 2011~2015년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2017년 이후 기간과 맞물린 양상이다.

그림 18 가구 균등화 순자산 지니계수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지니계수

주1) 순자산: 자산(금융자산, 실물자산)-부채(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주2) 자산5분위 배율: 자산 상위20% 계층의 평균자산을 자산 하위20% 계층의 평균자산으로 나눈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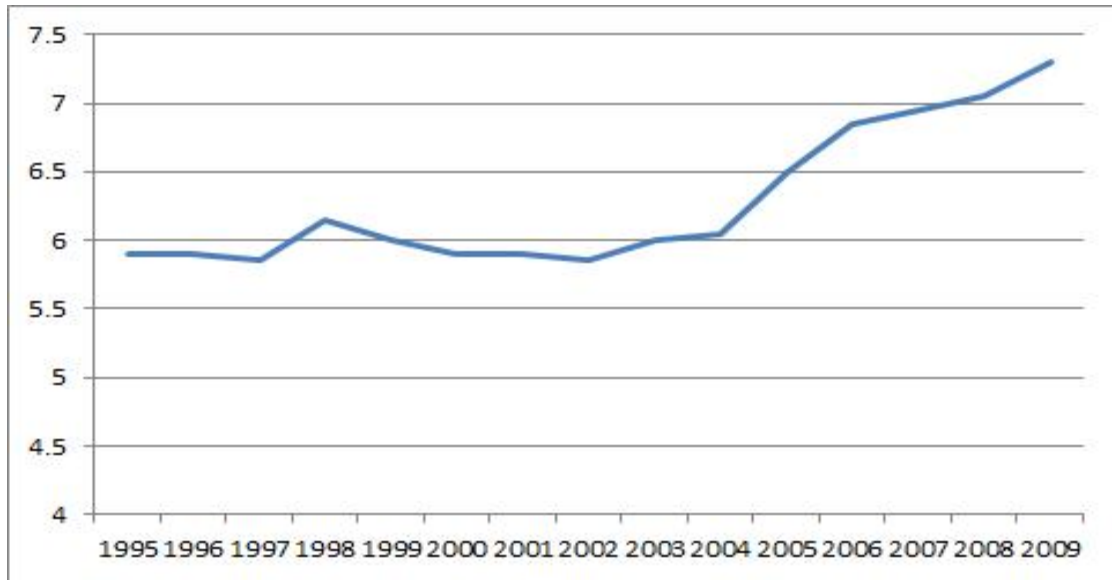
3. 피케티 지수

- 피케티 지수 역시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점차 증가해왔는데, 특히 2019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 우리 사회의 자산 관련 불평등이 최근들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케티 지수는 한 사회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한 나라의 국부(정부와 가계 순자산)를 1년 동안 그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자산의 비율

을 뜻한다. 피케티 지수가 높아질수록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의 총량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소수에 집중되는 자산의 특성상 사회의 불평등도가 보다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¹⁷⁾.

-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자산/소득의 비율을 측정한 Lee and Yoon(2015)에 따르면(〈그림 19〉), 우리나라의 피케티 지수는 1995년 5.9에서 1998년 6.3로 증가했다가 다소 감소했지만, 이후 2009년 7.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림 19 1995~2009년 피케티 지수의 변화



출처: Lee and Yoon(2015) p. 15. 그래프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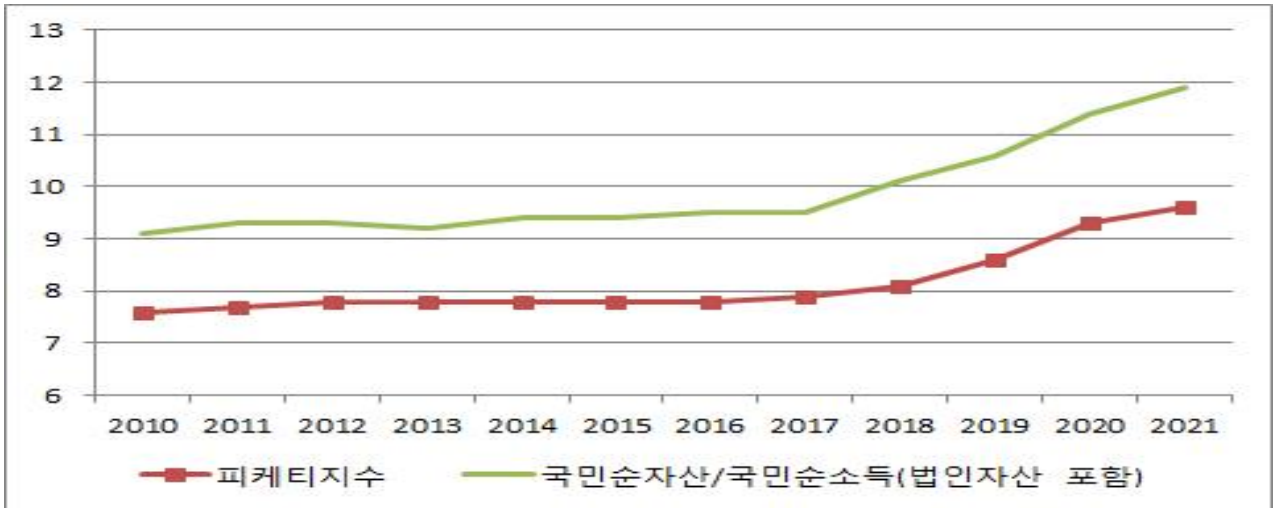
주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활용.

- 이후 〈그림 20〉은 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서 한국은행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것으로, 2010년 7.6 수준에서 머물던 피케티 지수는 2017년 7.9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으나, 2019년 8.6, 2021년 9.6으로 최근 4년사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법인의 순자산까지 포함한 배율 역시 2010년 9.1배에서 2021년 11.9배로 상승했다. 이는 프랑스(9.3배), 영국(6.0배)은 물론이고 캐나다(8.0배), 미국(5.2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¹⁸⁾.

17) 자료의 분절로 2010년 이전과 이후로 분리해 서술한다.

18) 한국, 미국, 캐나다는 2021년, 프랑스, 영국, 일본은 2020년 기준임.

그림 20 2010~2021년 피케티 지수의 변화 (단위: 피케티지수, 배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피케티지수	7.6	7.7	7.8	7.8	7.8	7.8	7.8	7.9	8.1	8.6	9.3	9.6
국민순자산 / 국민순소득(법인자산 포함)	9.1	9.3	9.3	9.2	9.4	9.4	9.5	9.5	10.1	10.6	11.4	11.9

출처: 고용진 의원실,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활용 데이터 계산.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불평등 최고조...“韓 작년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 헤럴드경제. 2022년 10월 7일자.

4. 자산불평등의 특징

1) 자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높다.

●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도는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득불평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 <표 10>에 나타난 개인 단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를 비교해보면, 자산불평등은 평균적으로 0.736, 소득불평등은 평균 0.527을 보이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비해 지니계수 0.2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IMF 경제위기 이후 1990년대 중반 자산불평등의 평균 지니계수는 0.729, 소득불평등은 0.478이었고, 2000년대에는 자산불평등 0.735, 소득불평등 0.524였으며, 2010년대에는 자산불평등은 0.742, 소득불평등 0.554를 보였다.
-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지니계수 역시 자산불평등은 평균 0.628, 시장소득 불평등은 평균 0.336을 보여,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비해 지니계수 0.3 정도로 두 배 가까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1995~2009년까지 가구 균등화 순자산 지니계수는 평균 0.659,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평균 0.292를 보였고, 2010년대에는 순자산 지니계수 평균 0.599, 시장소득은 0.396을 보였다¹⁹⁾.

19) 다만 가구 균등화 지수 기준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2010년 이전까지 가계동향조사 도시2인 근로자 기준으로 집계되었고, 2011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전국 단위 기준으로 집계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표 10 개인 및 가구 단위의 자산불평등 & 소득불평등 비교 (단위: 지니계수)

구분 연도	개인 단위 기준		가구 균등화 기준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시장소득)
1995	0.728	0.457	-	0.259
1996	0.731	0.486	-	0.266
1997	0.730	0.493	-	0.264
1998	0.727	0.467	-	0.293
1999	0.729	0.487	0.629	0.298
2000	0.729	0.497	0.654	0.279
2001	0.731	0.501	0.652	0.290
2002	0.732	0.513	0.682	0.293
2003	0.733	0.517	0.662	0.283
2004	0.733	0.520	0.670	0.293
2005	0.731	0.503	0.686	0.298
2006	0.738	0.538	0.682	0.305
2007	0.739	0.547	0.666	0.316
2008	0.740	0.553	0.643	0.319
2009	0.739	0.548	0.626	0.320
2010	0.741	0.557	0.612	0.315
2011	0.742	0.557	0.610	0.418
2012	0.741	0.554	0.617	0.411
2013	0.741	0.551	0.605	0.401
2014	0.742	0.550	0.594	0.397
2015	0.742	0.553	0.59	0.396
2016	0.742	0.555	0.586	0.402
2017	0.743	0.556	0.584	0.406
2018	0.744	0.556	0.588	0.402
2019	0.743	0.553	0.597	0.404
2020	0.742	0.553	0.602	0.405

- 일반적으로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인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만 비교해보더라도 모든 연도에서 소득불평등에 비해 자산불평등의 지니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11>).

표 11 개인 단위 세전소득과 개인의 순자산 불평등도 비교 (단위: 지니계수)

연도	미국		프랑스		스웨덴	
	소득	자산	소득	자산	소득	자산
1995	0.528	0.799	0.443	0.686	0.401	0.734
1996	0.536	0.803	0.442	0.706	0.393	0.721
1997	0.542	0.809	0.446	0.715	0.404	0.732
1998	0.543	0.812	0.448	0.723	0.405	0.729
1999	0.547	0.811	0.449	0.727	0.409	0.736
2000	0.550	0.811	0.449	0.729	0.391	0.736
2001	0.544	0.806	0.447	0.723	0.381	0.741
2002	0.540	0.805	0.441	0.713	0.383	0.744
2003	0.544	0.808	0.444	0.710	0.394	0.743
2004	0.551	0.810	0.446	0.706	0.399	0.745
2005	0.561	0.810	0.441	0.701	0.410	0.745
2006	0.568	0.811	0.441	0.705	0.419	0.745
2007	0.564	0.816	0.445	0.710	0.419	0.748
2008	0.562	0.824	0.441	0.707	0.412	0.746
2009	0.557	0.828	0.428	0.712	0.403	0.740

2010	0.568	0.834	0.435	0.727	0.419	0.744
2011	0.573	0.838	0.440	0.721	0.413	0.742
2012	0.584	0.842	0.432	0.716	0.392	0.740
2013	0.578	0.844	0.430	0.722	0.394	0.742
2014	0.585	0.843	0.431	0.727	0.400	0.744
2015	0.584	0.841	0.428	0.728	0.409	0.743
2016	0.584	0.839	0.425	0.727	0.393	0.739
2017	0.581	0.828	0.423	0.727	0.400	0.739
2018	0.584	0.827	0.424	0.729	0.394	0.740
2019	0.581	0.826	0.426	0.729	0.396	0.737
2020	0.581	0.826	0.426	0.729	0.406	0.734
2021	0.581	0.826	0.426	0.733	0.406	0.742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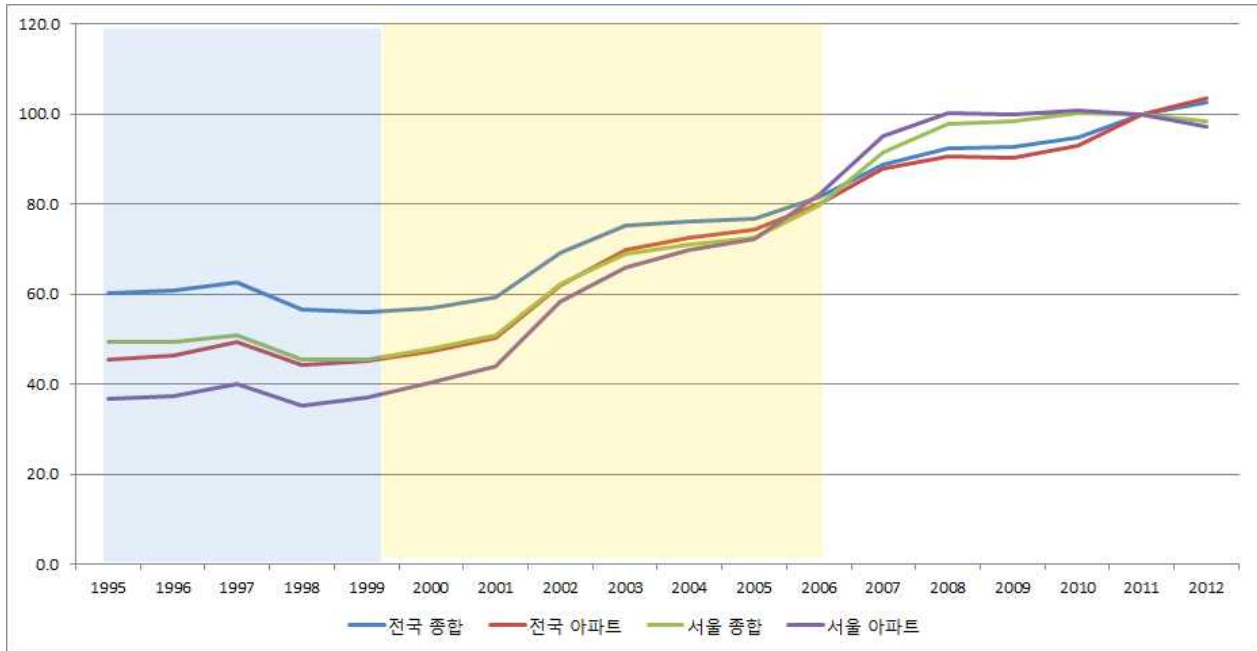
2)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받는다.

-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의 특징적인 점은 부동산 시장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전국 및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 매매 가격지수는 1990년대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급등하였다. 이 시기 순자산 지니계수는 개인 단위와 가구 균등화 기준 모두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림 21>에서 확인되듯이 2011년 6월의 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1980~1990년대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²⁰⁾.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995년 60.3에서 1999년 56으로 연평균 -1.83% 감소했고, 전국 아파트는 45.4에서 45.3으로 연평균 -0.06% 감소했다.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49.3에서 45.6으로 연평균 -1.93% 감소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6.9에서 37.1로 연평균 0.14% 증가율을 보였다(파란 부분).
 - 이 시기 개인 단위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평균 0.73 수준에서 유지되며 자산불평등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 2000년대 들어서는 전국과 서울 등 지역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00년 57에서 2006년 81.6로 연평균증가율 6.16%, 전국 아파트는 47.2에서 80.2로 연평균증가율 9.24%, 서울 주택 종합 지수는 47.8에서 79.8로 연평균증가율 8.92%, 서울 아파트는 40.3에서 82.1로 연평균증가율 12.59%를 보이며 모두 증가했다(노란 부분). 특히 2004년~2006년 동안에만 체감 상승률이 50%가 넘는 정도로 부동산은 심각한 폭등기였다²¹⁾.
 - 이 시기 <그림 22>의 개인 단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00년 0.729에서 2006년 0.738로 상승하였고, <그림 23>의 가구 균등화 기준으로는 2000년 0.652에서 2006년 0.682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20) 1980년대의 주택가격은 그래프에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90년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어졌다. 출처: 부동산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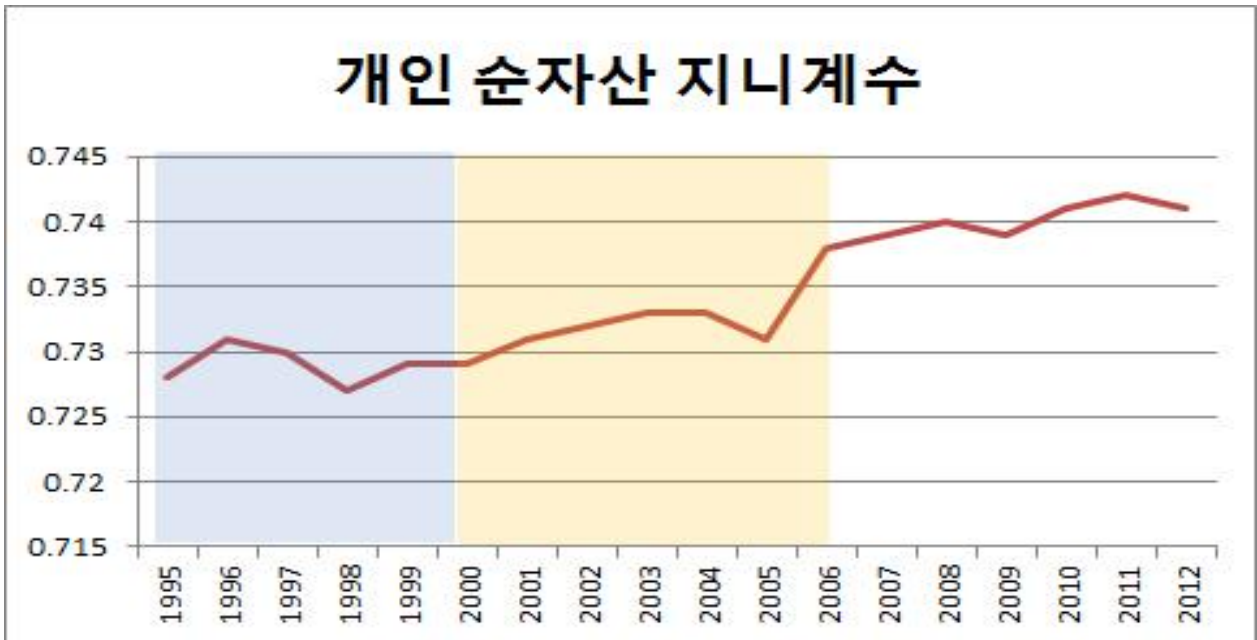
21) '부동산 10년 주기설' 들어맞을까. 매일경제. 2008년 8월 22일자.

그림 21 1995~2012년 전국 종합 및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1.6=100) (단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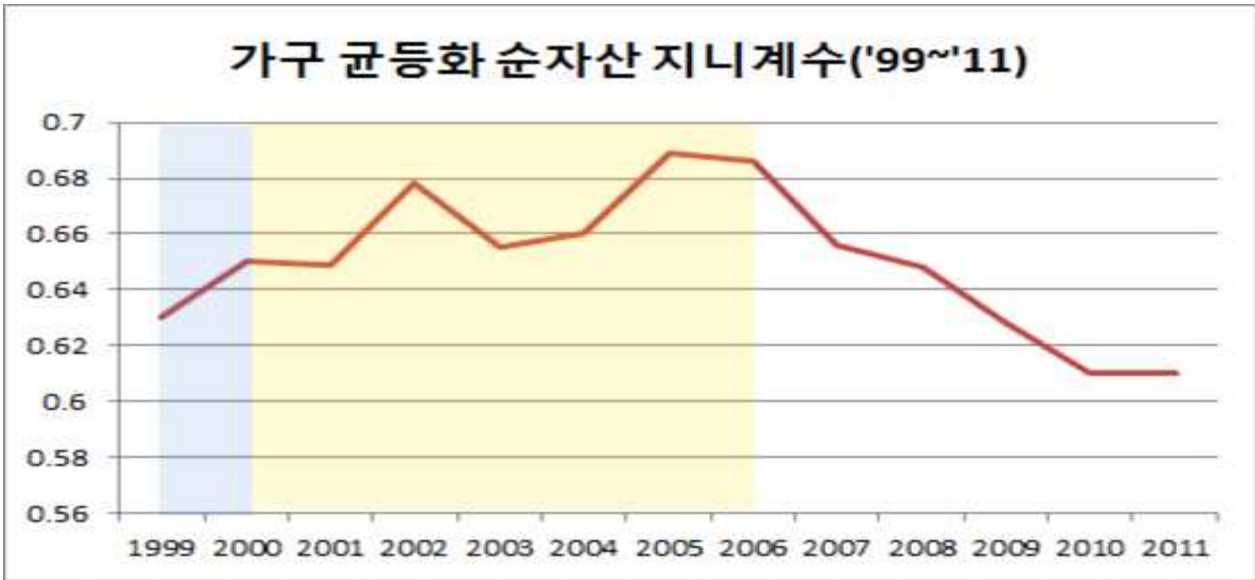
출처: 부동산통계시스템

그림 22 개인 단위의 순자산 지니계수(1995~2012년)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그림 23 가구 균등화 지수를 반영한 순자산 지니계수 (1999~2011년)



출처: 전병유(2016).

연도	전국		서울		개인 순자산 지니계수	가구 균등화 순자산 지니계수
	종합	아파트	종합	아파트		
1995	60.3	45.4	49.3	36.9	0.728	-
1996	60.7	46.3	49.4	37.3	0.731	-
1997	62.5	49.3	51.0	40.2	0.730	-
1998	56.7	44.3	45.6	35.3	0.727	-
1999	56.0	45.3	45.6	37.1	0.729	0.629
'95~' 99 연평균증가율	-1.83%	-0.06%	-1.93%	0.14%	-	-
2000	57.0	47.2	47.8	40.3	0.729	0.654
2001	59.3	50.2	50.9	44.1	0.731	0.652
2002	69.1	61.9	62.4	58.3	0.732	0.682
2003	75.4	69.7	69.0	66.0	0.733	0.662
2004	76.2	72.6	71.1	69.7	0.733	0.670
2005	76.8	74.4	72.4	72.2	0.731	0.686
2006	81.6	80.2	79.8	82.1	0.738	0.682
'00~' 06 연평균증가율	6.16%	9.24%	8.92%	12.59%	-	-
2007	88.9	88.0	91.4	95.2	0.739	0.666
2008	92.5	90.6	97.9	100.4	0.740	0.643
2009	92.7	90.4	98.5	99.8	0.739	0.626
2010	94.9	93.0	100.1	100.8	0.741	0.612
2011	99.9	99.9	99.8	99.8	0.742	0.610
2012	102.8	103.7	98.3	97.1	0.741	0.617

출처: 부동산통계시스템

- 2011년~2017년까지 주택가격은 다소 주춤했다가 완만히 상승했는데, 이 시기에는 개인 단위와 가구 균등화 기준의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7년부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순자산 지니계수 역시 2017년 이후부터 상승하면서 이 시기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21년 6월의 가격을 100이라 했을 때, <그림 24>에서 확인하듯이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1년 82.4에서 2017년 88.9로 연평균증가율은 1.32%, 전국 아파트는 78.7에서 87.2로 연평균증가율 1.86%를 보이며 상승했다.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지수는 2011년 83.8에서 2017년 86.4까지 완만하게 연평균증가율 0.05%를 보이며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 역시 2011년 79.7에서 2017년 83.7까지 연평균증가율 0.18%를 보이며 소폭 상승하였다.
 - 이 시기 <그림 25>와 <그림 26>를 살펴보면 개인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1~2017년 0.742 수준을 보이며 유지되었고, 가구 균등화 지수 기준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0에서 2017년 0.584로 감소하였다.
 - 이후 전국 주택 종합지수는 2017년 88.9에서 2022년 7월 104.8로 연평균증가율 3.35%, 전국 아파트는 87.2에서 106.1로 증가율 4%, 서울 주택 종합지수는 86.4에서 103.6으로 증가율 3.7%, 서울 아파트는 83.7에서 104.2로 증가율 4.48%를 보이며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 이 시기 개인 단위 순자산 지니계수는 0.742에서 0.743으로, 가구 균등화 기준에서는 0.584에서 0.602로 상승하며 부동산에 의한 순자산 불평등이 다시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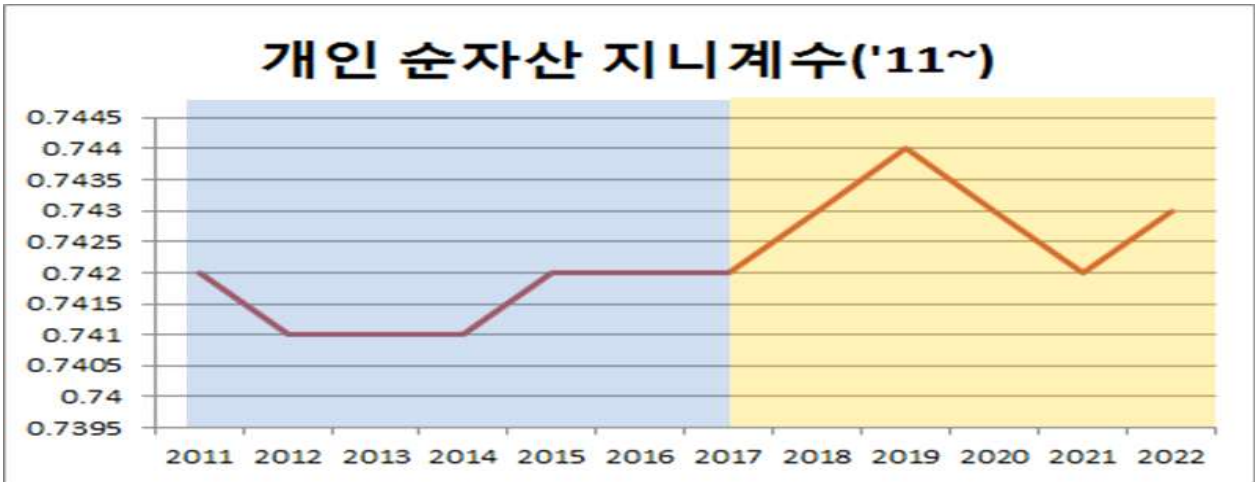
그림 24 2011년~2022년 전국 종합 및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1.6=100) (단위: 지수)



출처: 부동산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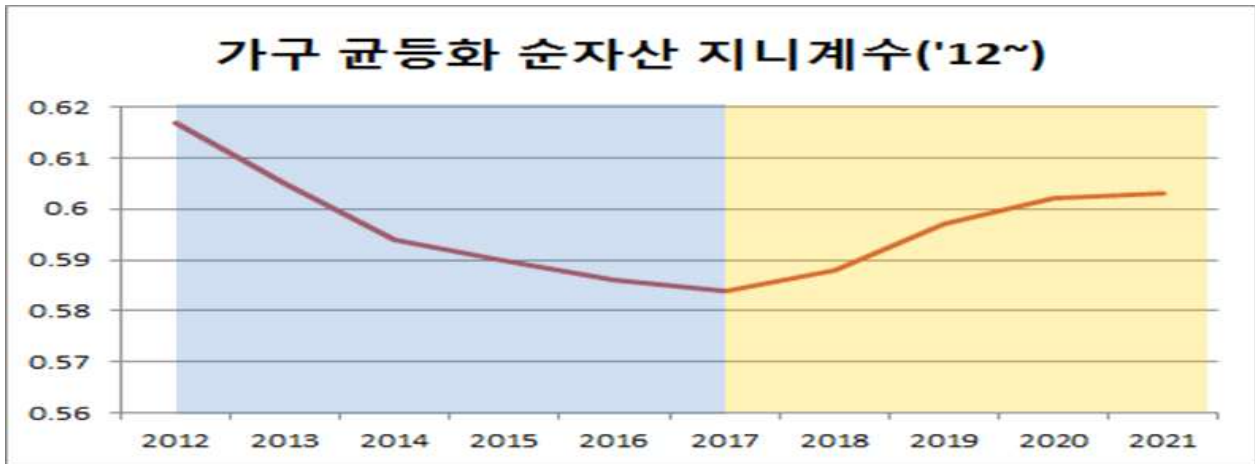
주1) 2022년 7월까지의 통계임.

그림 25 개인 단위 순자산 지니계수 (2011년~)



출처: World Inequality Databook

그림 26 가구 균등화 지수 순자산 지니계수 (2012년~)



출처: 전병유(2016).

연도	전국		서울		개인 순자산 지니계수	가구 균등화 순자산 지니계수
	종합	아파트	종합	아파트		
2011	82.4	78.7	83.8	79.7	0.742	0.610
2012	84.0	80.5	81.9	76.6	0.741	0.617
2013	82.9	79.2	78.9	73.0	0.741	0.605
2014	84.1	81.1	79.2	73.9	0.741	0.594
2015	86.3	84.3	81.4	76.9	0.742	0.59
2016	88.0	86.3	84.0	80.4	0.742	0.586
'11~' 16 연평균증가율	1.32%	1.86%	0.05%	0.18%	-	-
2017	88.9	87.2	86.4	83.7	0.742	0.584
2018	90.2	87.9	91.4	90.3	0.743	0.588
2019	90.0	86.4	93.3	91.9	0.744	0.597
2020	92.6	89.6	96.0	95.2	0.743	0.602
2021	100.5	100.5	100.5	100.6	0.742	-
2022	104.8	106.1	103.6	104.2	0.743	-
'17~' 22 연평균증가율	3.35%	4.00%	3.70%	4.48%	-	-

출처: 부동산통계시스템.

- 이렇듯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이 부동산 시장의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중 65%에 달하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기일 때에는 자산불평등이 악화되고, 시장이 안정화될 때에는 자산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 OECD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의 구성 비율이 64.4%나 되어 미국(28.1%), 일본(37.9%), 영국(45.2%), 호주(57.0%) 등에 비해 높았다²²⁾. 반면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35.6%로 타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미국 71.9%, 일본 62.1%, 영국 54.8%, 호주 43.0%).
- 자산불평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만큼 부동산 가격이 높고, 급등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산격차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표 12>에 따르면 서울의 가구 단위 순자산액은 2020년 6억 4,862만원으로 비수도권의 가구 단위 순자산액 3억 1,413억원과 비교하여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연도별 전국 가구 단위 순자산액 (단위: 만원)

시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26,875	26,831	27,488	28,429	29,918	31,572	34,368	35,281	36,287	41,452
수도권	33,432	32,190	32,528	33,111	34,331	36,737	40,844	42,694	44,760	51,992
서울	38,851	36,982	37,861	39,262	40,944	44,741	50,641	53,605	56,762	64,862
인천	21,086	20,363	20,882	21,562	22,667	24,131	26,735	27,882	32,106	36,178
경기	31,616	30,852	30,720	30,625	31,527	33,005	36,090	37,329	38,225	45,653
비수도권	20,925	21,958	22,893	24,148	25,871	26,775	28,363	28,413	28,259	31,413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표 13>은 연도별 전국 토지자산 순자본소득²³⁾을 나타낸 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땅값이 특히 최근들어 가파르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2011~2020년 전체 기간동안 연평균증가율은 수도권 5.5%, 서울 5.89%, 비수도권 6.96%로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높았는데, 2018~2020년 기간만을 놓고 보면 비수도권은 6.39%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반면 수도권은 10.32%, 서울은 12.35%로 3년 사이에 땅값이 매우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 앞서 집값과 자산 지니계수를 비교한 <그림 24, 25, 26>과 통합해 살펴보면 서울의 집값과 토지 상승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았을 때에는 자산 불평등도가 악화되지 않았는데, 서울의 상승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았을 때에는 자산 불평등도가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집값이 비싸고 상승률이 높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전체적인 자산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의 상황에 따라 자산 불평등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금융투자협회(2021). 「2021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p.1.

23) 토지자산에는 건물부속토지와 구축물부속토지, 농경지, 임야, 문화오락용토지, 기타토지 등이 포함되어있다. 건물은 제외이다.

표 13 연도별 전국 토지자산 순자본스톡(명목)

시도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비수도권
2011~2020년 연평균증가율	6.08%	5.50%	5.89%	5.38%	5.09%	6.96%
2018~2020년 연평균증가율	8.64%	10.32%	12.35%	7.20%	8.74%	6.39%

출처: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주1) 2020년은 잠정치임.

3. 자산의 세대 이전

- 최근 10년간 주목할 점은 자산의 대물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증여·상속의 규모는 2010년 약 53조 8천억원에서 2021년 약 173조 7천억원으로 3배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 <표 14>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별 증여·상속 건수와 가액을 나타낸 것으로, 증여 규모는 2010년 20만 7천여건, 28조 9천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1년 80만건, 117조 5천억원까지 증가했고, 상속 규모 역시 2010년 32만 5천여건, 24조 9천억원에서 2021년 34만 5천여건, 56조 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10~2021년의 기간동안 증여와 상속 규모는 각각 약 620조 7천억원, 439조 2천억원, 총 1,060조로 2021년 명목 GDP인 2,071조의 절반 수준이다.

표 14 증여·상속 재산가액 및 건수 (단위: 백만원, 건)

연도	증여		상속		합계		총 재산가액 증 증여 비율(%)
	증여재산가액	건수	상속재산가액	건수	재산가액	건수	
2010	28,898,571	207,399	24,915,019	325,045	53,813,590	532,444	53.7
2011	30,321,207	251,506	29,253,734	276,972	59,574,941	528,478	50.9
2012	24,906,039	197,717	26,537,441	287,094	51,443,480	484,811	48.4
2013	31,684,065	229,143	25,779,722	282,232	57,463,787	511,375	55.1
2014	37,164,302	226,811	28,840,066	285,723	66,004,368	512,534	56.3
2015	39,035,448	267,136	40,649,194	324,349	79,684,642	591,485	49.0
2016	39,759,419	282,889	36,334,843	283,877	76,094,262	566,766	52.3
2017	54,708,391	326,316	35,741,228	229,826	90,449,619	556,142	60.5
2018	65,936,519	376,823	46,623,293	356,109	112,559,812	732,932	58.6
2019	74,094,685	400,299	38,868,060	345,290	112,962,745	745,589	65.6
2020	76,657,482	461,800	49,453,062	351,648	126,110,544	813,448	60.8
2021	117,486,960	800,109	56,224,334	344,184	173,711,294	1,144,293	67.6
합계	620,653,088	4,027,948	439,219,996	3,692,349	1,059,873,084	7,720,297	-

출처: 국세통계포털. '증여, 상속세 신고 현황'

주1) 과세 대상과 과세미달 대상을 모두 포함한 금액, 인원임.

- 눈 여겨볼 점은 상속에 비해 증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전체 상속·증여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53.7%로 절반 정도였으나 2021년에는 67.6%를 보이며 증여의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증여는 사망 전 사전 상속의 의미가 있고, 상속인에 비해 수증인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증여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젊은층에 대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이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은 2010년 24조 9천억원에서 2021년 56조 2천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증여는 2010년 28조 9천억원에서 2021년 117조 5천억원으로 4배 증가해 총 상속가액의 두 배가 넘었다.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상속건수는 2010년 32만 5천건에서 2021년 34만 5천건으로 거의 달라지지 않은 반면, 증여는 2010년 20만 7천건에서 2021년 80만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해, 상속에 비해 증여가 확연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을 나타낸 <표 15>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수증인의 비중은 과세미달을 제외하고도 2010년 66.2%에서 2021년 69.4%로 증가했다²⁴⁾. 특히 30대 이하의 청년 수증인 비중은 2010년 전체 수증인의 38.9%에서 2021년 47.5%를 차지하는 등 전체 증여의 절반 가량이 30대 이하 청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 (단위: 명)

연도	10대	20대	30대	40대	30대 이하 비중(%)	40대 이하 비중(%)
2010	5,390	11,140	21,024	26,365	38.9	66.2
2011	6,684	12,613	26,639	37,123	36.3	65.7
2012	4,886	8,988	18,459	26,499	35.4	64.4
2013	5,861	9,935	20,539	30,173	33.1	60.7
2014	5,554	10,377	19,458	28,686	33.5	60.7
2015	5,757	10,278	19,600	27,506	35.2	62.4
2016	6,446	12,789	25,251	33,976	35.6	62.8
2017	8,552	16,198	28,368	38,887	36.3	62.9
2018	10,880	21,198	34,219	42,429	41.3	67.8
2019	10,761	22,936	34,456	43,947	40.1	66.0
2020	11,056	22,980	37,015	43,325	38.7	62.3
2021	23,359	46,756	60,726	60,455	47.5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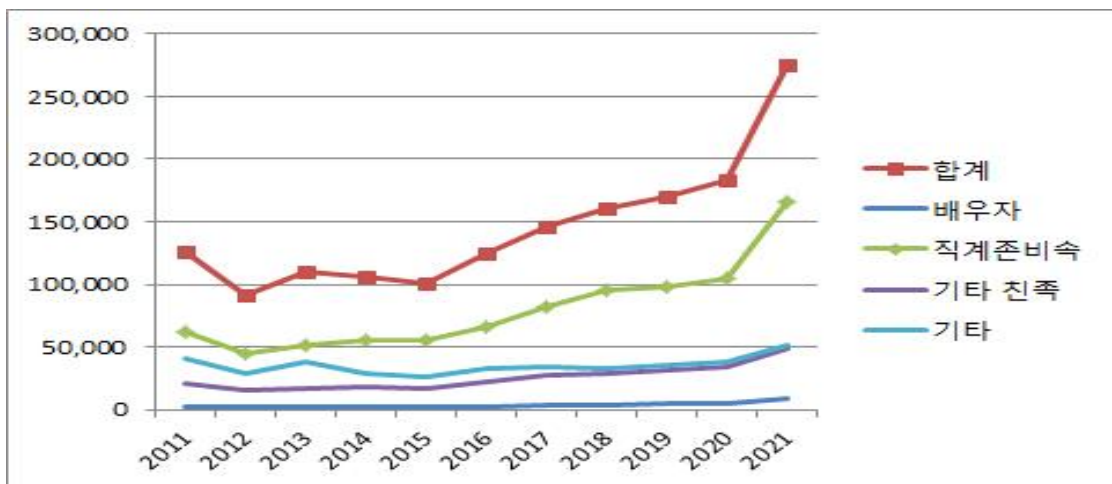
출처: 국세통계포털.

주1) 과세 미달 제외.

주2) '비중'은 전체 수증인 중 30대 이하, 40대 이하 수증인의 비중을 뜻함.

-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를 의미하는 직계존비속에게 이루어졌고, 2020-2021년 사이 폭증한 증여건수 역시 자녀에게로의 증여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7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 (단위: 건)



출처: 국세통계포털.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

24) 상속인의 연령은 국세청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 한편 상속과 증여 재산 중에서도 특히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증여의 비중이 2021년 기준 67%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의 핵심인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세대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물려주는 현금 역시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현금 등 금융자산 증여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본격적인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은 부를 세습하고, 청년 세대 내 계층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 <표 16>에 나타난 2010~2021년의 기간동안 과세 미달을 제외한 재산종류별 상속과 증여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상속·증여는 2010년 12조 1천억원에서 2021년 50조 5천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건수 역시 7만건에서 16만 7천건으로 증가했다.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상속·증여는 2010년 7조 2천억원에서 2021년 24조 9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건수는 4만건에서 13만 5천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상속·증여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2.7%에서 2015년 56.6%로 하락하다가 2016년부터 상승해 2021년 67%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반대로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비중은 2010년 37.3%에서 2021년 33%로 하락했다.

표 16 상속과 증여의 재산종류별 가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토지+건물		유가증권+금융자산		토지+건물 재산가액 비중	유가증권 +금융자산 재산가액 비중
	재산가액	건수	재산가액	건수		
2010	12,107,139	70,265	7,209,948	39,896	62.7	37.3
2011	14,439,077	84,565	9,209,405	54,919	61.1	38.9
2012	11,644,178	59,435	8,835,928	47,172	56.9	43.1
2013	12,333,193	64,968	9,579,548	49,363	56.3	43.7
2014	14,080,281	66,647	10,234,081	52,820	57.9	42.1
2015	13,235,061	63,566	10,160,781	50,555	56.6	43.4
2016	17,339,687	82,226	11,709,516	62,406	59.7	40.3
2017	21,703,092	96,704	13,624,209	64,646	61.4	38.6
2018	26,025,291	107,771	15,076,648	74,658	63.3	36.7
2019	27,281,308	114,980	15,888,179	78,626	63.2	36.8
2020	30,336,131	114,145	18,950,005	91,413	61.6	38.4
2021	50,474,467	166,589	24,861,838	134,655	67.0	33.0

출처: 국세통계포털, '증여세 결정 현황'

주1) '비중' 은 총 상속·증여 중 토지+건물, 유가증권+금융자산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주2) 과세 미달 제외.

- 한편, 상속을 제외한 증여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표 17>에 따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증여 모두 재산가액과 건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증여는 2010년 6.87조원, 6만 4천여건에서 2021년 32.39조원, 15만건으로 증가했고, 금융자산은 2010년 5.41조원, 3만 6천여건에서 2021년 32.39조원, 12만건으로 증가했다. 특징적인 점은 상속과 증여를 모두 포함한 집계에서는 2/3 이상이 부동산으로 대물림되었는데, 증여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이었다는 점이다.

표 17 증여의 재산종류별 가액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토지+건물		유가증권+금융자산		토지+건물 재산가액 비중	유가증권 +금융자산 재산가액 비중
	재산가액	건수	재산가액	건수		
2010	6,866,406	64,132	5,413,570	36,065	55.9	44.1
2011	8,505,665	77,340	7,002,766	50,429	54.8	45.2
2012	5,782,883	51,737	6,187,955	42,356	48.3	51.7
2013	6,572,178	56,806	7,234,022	44,253	47.6	52.4
2014	7,004,121	57,069	7,034,500	46,771	49.9	50.1
2015	6,760,661	55,093	7,101,539	45,318	48.8	51.2
2016	9,578,675	72,470	7,457,735	56,246	56.2	43.8
2017	13,353,756	87,064	13,353,756	58,181	50.0	50.0
2018	16,270,685	96,563	16,270,685	66,859	50.0	50.0
2019	16,989,819	103,207	16,989,819	70,103	50.0	50.0
2020	17,329,004	99,951	17,329,004	81,341	50.0	50.0
2021	32,387,753	149,321	32,387,753	121,927	50.0	50.0

출처: 국세통계포털. '증여세 결정 현황'

주1) '비중' 은 총 증여 중 토지+건물, 유가증권+금융자산의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
 주2) 과세 미달 제외.

- 그러나 부동산이 아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역시 부동산 취득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금조달계획서 123만 7,243건을 분석한 강준현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주택을 매입한 2030세대 중 증여·상속으로 자금을 조달한 비중은 전국 평균 22.7%에 달했는데, 특히 강남 3구는 36.7%를 보여 현금 증여를 통한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31.2%, 수도권 24.6%, 지방 18.5%). 강남3구의 증여·상속을 통한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비율은 2018년 0.9%에 그쳤었지만 2019년 상반기 19.6%, 2020년 상반기 32.3%, 2021년 상반기 36.7%로 최근들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²⁵⁾. 강남 3구는 부동산 불패 신화의 중심지라고 불릴만큼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는 점에서 소위 '부모 찬스' 를 활용하여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2030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간 불평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가 100년 혹은 반 세기 이상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속·증여의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축적된 부(자산)의 세대 간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격차가 점점 더 명확하게 나뉘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다운 외(2019)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상속·증여 재산가액의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는 6%를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⁶⁾. 2010년 기준 프랑스는 15%, 독일은 10%, 미국은 8%²⁷⁾, 스위스는 14%²⁸⁾를 상회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민소

25)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집 사는 강남3구 20~30대, 비수도권보다 2배 많았다”. 세정일보. 2021년 10월 5일자.

26) 정다운·강동익·최승문(2019).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방안 연구'. p.101.

27) 「21세기 자본주의」. 토마스 피케티. p.425.

28) Marius Brulhart et al(2018). 'Inheritance flows in Switzerland, 1911-2011'. p.6.

특 대비 상속·증여자산의 규모는 산업화의 역사가 긴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상속·증여가 본격화되고 있고, 2016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국민소득 대비 상속증여액 규모는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22년 신한라이프 산하 상속증여연구소가 대도시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소득이 상위 10~30%(연 7,000만~1억 2,000만 원)인 5060세대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속·증여 인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88.3%였다. 반면 내 노후를 위해 모두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이들의 자산 이전 방식에 대한 선호는 ‘증여’가 61.3%로 가장 높았고, 상속이 27%로 뒤를 따랐다²⁹⁾. 증여를 선호하는 이유 중 40%는 절세 등 세금을 이유로 선호했다³⁰⁾.
- 2019년 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2,415명, 임대소득 총액은 504억 1,900만원이었다. 미성년 부동산 임대업자 1인당 연간 2,088만원, 월 174만원을 부동산 임대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이다³¹⁾.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는 2013년 136명, 2014년 154명에서 2020년 366명, 2021년 673명으로 10여년 사이에 5배 가까이 급증했다.
- 최근 2030세대가 가상화폐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는데, 20대의 가상화폐 평균 투자금액이 400만원 남짓인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적은 돈이라도 이용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 않는 이상 물려받는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김희재 의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2021년도 기준 자산 상위 20%(9억 8,185만원)와 하위 20%(2,784만원)의 자산 격차는 35.27배로, 전년도의 35.2배보다 확대되었다³²⁾. 2020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구(1억 2,832만원)와 하위 20% 가구(1,968만원) 간 경상소득의 격차가 6.5배인 것에 비해 자산격차가 훨씬 크고, 경상소득 격차(6.5배)에 비해 자산격차(35.27배)가 6배 가까이 더 크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격차가 반영된 것이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청년 세대의 계층 구분과 고착화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케 한다.
 -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만 19~34세 4,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의 52.9%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21.7%였다. 주식과 코인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들의 39.6%가 장기적 자금운용을 위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단기적 수익 실현을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도 30.2%였다. 또한 응답자의 35.5%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빚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부채 발생 요인은 주거

29) 이외에 7%는 본인 소비, 4.7%는 무응답이었다.

30) “대중부유층 “상속보다 증여”...30%는 자산 팔아 세금 마련”. 서울경제. 2022년 1월 24일자.

31) “월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 2400명...5세 미만 영유아만 131명”. MK증권. 2019년 10월 1일자.

32)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년 5월 16일 보도자료.

비 마련(38%)이 가장 높았고, 생활비(26.1%), 학자금 마련(19.8%)이 뒤를 이었다³³⁾.

-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국내 5개 원화 가상 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회원은 전체 926만 8,298명이었으며, 그 중 57.3%는 30대 이하 청년층이었다(20대 이하 246만 2,795명, 30대 이하 285만 6,738명). 투자금 비중으로는 2021년 말 현재 30대 이하가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투자금 보유액은 4조 2,425억원, 30대 이하는 14조 8,036만원이었고, 이는 2020년에 비해 각각 3조 6,426억원, 10조 6,63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었다³⁴⁾.
- 2017~2019년 12월말 서울과 6대 광역시 및 경기지역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25~64세 2,5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이용 경험을 조사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2030의 가상화폐 평균 투자금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20대 평균 투자금액은 2017년 293만원에서 2018년 399만원, 2019년 416만원으로, 30대는 374만원에서 590만원, 898만원으로 증가했다³⁵⁾.
- 이러한 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러시는 계층 상승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이른바 ‘흙수저’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연애·결혼·출산 등 3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 들은,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가져다주리라 기대되는 가상화폐 투자가 현 상황의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진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취업은 힘들고 부의 대물림은 심각해진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온 세대”라며, “그런 청년들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리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다 보면 그것이 유일한 계층 사다리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³⁶⁾.

33) “‘세대 간 격차’ 자산 형성 막막한 청년들...”맞춤형 지원 필요“. 아주경제. 2022년 3월 5일자.

34)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들이 코인에 19조원 투자”. 코인데스크. 2022년 3월 31일자.

35) “60대, 가상통화에 659만원 투자”. 농민신문. 2018년 3월 12일자.

“취업난, 집값폭등에 절망 2030 용돈털어 비트코인 사는데...‘손실경험이 더 많아’”. 매일경제. 2021년 1월 9일자.

36) ‘N포세대’의 확산...“가상화폐, 흙수저 탈출 마지막 기회”. 한국일보. 2018년 1월 15일자.

4. 소득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앞서 지적했듯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개인 세전소득 기준으로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가구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으로도 2010년 이후 완화되다가 2015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는 반면 복지 등을 통한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가구균등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림11>와 <그림 12>, <그림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복지 등을 통한 공적이전소득으로 발생하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가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의한 빈곤탈출 및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도 1/3에서 1/5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취했던 문재인 정부 기간, 시장소득불평등도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는 것은 소득불평등 완화에 있어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바, 향후 시장 분배 보다 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는 2021년 개인 단위 기준으로 0.743으로, 미국(0.826)이나 이탈리아(0.753), 독일(0.751)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비율은 11.9배로, 미국(5.2배)이나 캐나다(8배)보다도 훨씬 높은 편이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에 비해 자산 증가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더 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다른 선진국과 달리 자산의 2/3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특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등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필수적임을 확인시켜준다.
- 또한 2010년 이후 본격화된 자산의 세대 이전이 부의 세습을 넘어 미래세대의 계층 고착화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자산 및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금보다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8개국의 보유세를 비교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은 5.3배로 가장 높은 반면, GDP 대비 보유세율은 0.8%로 비교대상 국가 평균(2.1%)의 1/3 수준에 불과해, 독일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보유세 실효세율 역시 0.16%로 이들 8개 국가의 평균인 0.5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표 18>).
 - 이에 대해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별 통계생산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 지적했지만, 오랜 기간보유세 관련 연구를 해온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부담은 GDP 대비가 아닌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봐야한다” 고 지적한 바 있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 “비교 대상 8개국은 전부 주택과 토지 가치를 측정해 발표

하는 국가” 라고 밝혔다. 또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조세 연구에서 실효세율 연구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통용된다” 고 지적했다³⁷⁾.

표 18 OECD 8개국 부동산 보유세 비교 (2018년 기준)

	보유세 실효세율(%)*	GDP 대비 부동산 총액(배)	GDP 대비 보유세율(%)
호주	0.34	5.0	1.7
캐나다	0.87	3.6	3.1
프랑스	0.55	4.9	2.7
독일	0.12	3.6	0.4
일본	0.52	3.6	1.9
미국	0.90	3.0	2.7
영국	0.77	4.0	3.1
한국	0.16	5.3	0.8
8개국 평균	0.53	4.1	2.1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외」. 재정포럼 4월호. p.55

주1) *: 보유세 실효세율은 보유세액을 부동산자산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OECD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계산.

- 우리나라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나 소유주택 수에 따라 6%(최저 기본세율)에서 70%(다주택자 최고 중과세율)까지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에서 동일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우리나라는 4,845,000원이 과세되지만 미국은 18,750,000원, 일본은 57,750,000원이 과세된다³⁸⁾. 국제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은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자산가들에게 강남의 이른바 “뽕뽕한 집 한 채”가 강조되는 이유이다.
- 한편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 차익의 경우 현재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최고 27.5%)를 과세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 개인의 총 주식 양도가액(약 4,389조원³⁹⁾)의 약 1.8%(77.6조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
- 국제적으로 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뉴질랜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과세 방식(종합, 분류, 분리 과세)과 과세 기준(보유 기간 등)은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간주해 최고 37%를 과세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종합과세로 최고 60%까지, 호주도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⁴⁰⁾.

37) “보유세 실효세율 0.16% 공격하는 국민의힘, 왜?”. 한겨레. 2021년 11월 22일자.

38)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결국 ‘부자감세’”.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1년 10월 26일자.

해당 비교는 5년 보유 및 거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미국은 연방소득세만, 일본은 소득세만 계산한 금액이다. 미국은 2년 거주 시 부부합산 기준 50만 달러가 소득공제되며 일본은 3천만엔 소득공제가 되며 5년 초과 시 15% 세율을 적용한다.

39) 상장주식 양도가액(한국거래소의 투자자별매매동향)에서 2020년 한해동안 개인의 상장주식 매도거래액 합계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2021년 국세통계연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합계)의 합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p.22.

40) “주식 양도세 폐지,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 ‘최악의 부자감세’”. 한국세정신문. 2022년 2월 28일자.

- 근로소득과 대비되는 현행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에 대해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2023년부터 지분율이나 종목당 보유금액과 무관하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세법을 개정할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고, 더 나아가 현행 과세 대상 기준을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분율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⁴¹⁾.
- 현행 소득세법상 12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15%의 세율이, 연수입 1억인 경우 35%, 3억초과 5억이하는 40%, 10억 이상은 45%의 근로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비해 주식양도소득은 종목당 10억을 초과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 투자소득의 규모가 얼마이든 소득세를 내지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거의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여러개의 종목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종목당 1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총투자 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으로 전체 투자자중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종목당 1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10%의 수익만으로도 수억원의 투자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 이런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자산 불평등이 극심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유예하고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부자 감세’로 자산 격차와 이로 인한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한편 최근 상속·증여세와 관련하여 세율 인하에서 나아가 폐지 주장까지 제기되는 바, 산업화, 정보화시대 축적된 자산의 세대이전이 계층 고착화와 청년세대의 좌절 및 투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명목세율은 최고세율 50%로, OECD 회원국 중 2위이다(2015년 기준 직계 상속 최고세율 일본 55%, 한국 50%, 프랑스 45%, 영국, 미국 40% 등). 2021년에 걷힌 상속·증여세는 15조원으로, 전체 세수 중 4.5%를 차지했다.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명목세율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세율 인하는 물론 상속·증여세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가 이미 일정 궤도에 오른 1950년대 전후 선진국의 당시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42~1976년 기간동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77%에 달했고, 캐나다는 지금은 상속세를 폐지했으나 과거 1941년 상속세법 제정 후 최고 54%의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스웨덴 역시 과거 상속세 세율은 1948년 48.1%, 1973년 61.6%까지 구간이 설정된 바 있다⁴²⁾. 최근 스웨덴, 캐나다 등 일부

41)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이익소각”. 세무사신문 기고. 2022년 8월 16일자.

42) 한국경제연구원(2013).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p.21, p.25, p.39.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하나, 이는 상속 시점에 부과되던 기존 상속세를 자본 이익 실현 단계에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개념)로 전환한 것으로 상속세 전면 폐지의 근거 사례로 제기하는 하는 것은 맥락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⁴³⁾.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명목세율이 높은 것과 별개로,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참여연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평균 28.6%였으며,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결정세액은 16.7%에 그쳤다⁴⁴⁾.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 중 41.7%에 달하는 상속공제액에서 기인한다(2017년 기준).
- 점점 악화되는 자산불평등이 이제는 자녀 세대로까지 이전되어 미래세대의 계층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폐지는 자산불평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⁴⁵⁾.

43) “상속세 없앤 스웨덴, 캐나다는 세금 안 낼까? 과세 방식이 다를 뿐”. 한국일보. 2021년 5월 20일자.

44)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9년 5월 23일자.

45) OECD(2018).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p.101.

참고문헌

논문, 보고서 및 단행본

- IRS(2019).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 complete report 2019'
- Lee and Yoon(2015) "Capital in South Korea, 1966-2013,"
- Marius Brulhart et al(2018). 'Inheritance flows in Switzerland, 1911-2011'
- OECD(2018). 'The Role and Design of Net Wealth Taxes in the OECD'
- 노민선(2018).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 옥스팜. '2021 불평등 보고서, 불평등 바이러스' .
- 전병유(2016). 「한국의 불평등 2016」.
- 정다운·강동익·최승문(2019). '자산 격차 발생요인 분석 및 완화방안 연구' .
- 한국경제연구원(2013).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외' .
- 현대경제연구원(2018).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

온라인 자료 및 홈페이지

-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는 결국 '부자감세' ". 참여연대 보도자료.
- "상속세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 .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9년 5월 23일.
- KB부동산 데이터 허브.
- OECD Stats.
- World Inequality Databook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국세통계연보
- 금융투자협회(2021). 「2021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2년 5월 16일 보도자료.
- 부동산통계시스템.
- 장혜영 의원실(2020). '2015~2018년 이자,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의 100분위 자료' .
- 장혜영 의원실(2021) "올해 상반기, 청년 세대 주식 투자 위한 신규대출액 38조원 넘어" .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신문기사

- 'N포세대' 의 확산... "가상화폐, 흡수저 탈출 마지막 기회"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1150465214903>>
- "취업난, 집값폭등에 절망 2030 용돈털어 비트코인 사는데... '손실경험이 더 많아'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27271/>>
- " '부동산 10년 주기설' 들어맞을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08/08/517970/>>
- " '세대 간 격차' 자산 형성 막막한 청년들...맞춤형 지원 필요"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304113241023>>
- "60대, 가상통화에 659만원 투자"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FNC/287785/view?site_preference=normal>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이익소각" . 세무사신문 기고.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no=12307>>

“대중부유층 “상속보다 증여” ...30%는 자산 팔아 세금 마련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ZNSVP55>>

“무엇이 2030을 ‘영끌’ 로 내몰았나” .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20>>

“문제는 자산불평등이야, 바보들아” . 경향신문.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오피니언.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0270300055>>

“보유세 실효세율 0.16% 공격하는 국민의힘, 왜?”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20204.html>>

“부동산 ‘신계급사회’ ...사다리 끊어버린 164배 격차”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6851.html>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으로 집 사는 강남3구 20~30대, 비수도권보다 2배 많았다” .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43>>

“상속세 없앤 스웨덴, 캐나다는 세금 안 낼까? 과세 방식이 다를 뿐”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910440002186>>

“소득세 45% 냈는데, 죽어선 상속세 60%” 이중과세 논란. 국세신문.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610>>

“월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 2400명...5세 미만 영유아만 131명”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783105/>>

“주식 양도세 폐지,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 ‘최악의 부자감세’ ” .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3798>>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들이 코인에 19조원 투자” . 코인데스크.
 <<https://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62>>

“청년 45%, ” 일해서 번 돈으로 자산 못빌려 “...71% 주식-펀드 투자”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201/110537044/1>>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22-3

IMF 경제위기 이후 소득·자산불평등 양극화 추이 분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발행일 2022.10.25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원혜영)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22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 를 만들어 가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 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3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

※ 본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및 더좋은미래의 공식입장과 무관합니다 ※